

17기 교사 및 시민 대상 역사아카데미

‘알고 싶은 우리 역사’

—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의 모색 —

2016. **6.9~7.7** 매주 목요일 19:00~21:00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기 교사 및 시민 대상 역사아카데미

‘알고 싶은 우리 역사’

—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의 모색 —

2016. **6.9~7.7** 매주 목요일 19:00~21:00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목 차 〉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어떻게 볼 것인가?	<u>03</u>
고구려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u>33</u>
우리가 몰랐던 발해사.....	<u>47</u>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u>69</u>
동북아평화와 역사문제	<u>83</u>

17기 교사 및 시민 대상 역사아카데미

- 주제 : '알고 싶은 우리 역사'
 -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의 모색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 기간 : 2016. 6. 9~7. 7(매주 목) 19:00~21:00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11층)
- 역사 아카데미 주제 및 강사

No.	월/일	주 제	강 사
1	6/9 (목)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어떻게 볼 것인가?	서영수 (단국대 교수)
2	6/16 (목)	고구려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3	6/23 (목)	우리가 몰랐던 발해	윤재운 (대구대 교수)
4	6/30 (목)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5	7/7 (목)	동북아평화와 역사문제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 주제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어떻게 볼 것인가?

서영수 (단국대 교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어떻게 볼 것인가?

서영수 (단국대 교수)

1. 고조선사 연구의 쟁점과 흐름

고조선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 실체는 무엇인가?

고조선은 일연(一然)이 『三國遺事』 〈기이편〉에서 ‘古朝鮮- 王儉朝鮮’이란 편목을 정하고 『魏書』의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하여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라는 기록과 『古記』의 ‘환웅과 웅녀의 아들인 단군왕검이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처음으로 조선이라고 하였다.’는 전승을 소개한 이후 民族史의 源流로서 인식되었던 까닭에 역사학자나 일반인 모두의 높은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조명되어 왔다. 고조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얼마나 큰 나라였는가?

고조선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일반인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술한 의문점에 대해¹⁾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고조선사에 대한 인식체계와 연구방법의 차이에 의해 백가쟁명의 견해가 표명되고 있다.

고조선의 중심을 요동에 두었던 북한학계는 단군릉 조영을 계기로 급선회하여 평양을 고조선의 중심으로 보는 동시에 대동강 문화론을 강조하는 반면²⁾, 중국학계는 東

1) 고조선 전문연구자가 아닌 이른바 재야학계의 저서가 문정창의 『고조선사연구』 (1964,백문당) 이래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일반인의 궁금증을 대변한 저서로는 성삼제의 『고조선, 사라진역사』 (2005,동아일보사), 이덕일·김병기,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2006,위즈덤.) 등이 있다.

北工程을 통해 해묵은 箕子東來說을 다시 끄집어내어 고조선문화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실정이며²⁾, 최근에는 이를 확대한 ‘요하문명론’을 전개하여 고조선의 요람이었던 요서, 요동의 모든 문화를 중국문화의 원류로 보는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학계 일각에서도 고조선은 한국사도 아니고 중국사도 아닌 요동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반면, 신석기문화인 紅山文化를 고조선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학계의 경우 고조선사 연구 중에서도 단군을 비롯한 국가 형성 문제를 제외하면 그 중심지와 강역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되어왔으나, 대동강중심설, 요동중심설, 이동설 등으로 엇갈려 있어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고조선의 正體性 뿐 아니라 고조선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역사 지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일차적인 원인은 물론 고조선에 관한 자료가 소략하고 고대 우리민족의 활동무대가 오늘의 우리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韓, 中 문헌에 산견되는 고조선 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탓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고조선사 연구는 고려나 조선왕조 등 전근대 시대에도 단군의 국가 성립시기를 비롯하여 단군조선을 계승한 기자조선, 위만조선 등 3조선의 체계, 강역문제 등이 중요 관심사였으며, 근대 역사학에서는 단재 신채호가 1908년 大韓每日申報에 「檀君時代」를 게재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한국 학계의 연구는 크게 1945년 광복을 전환점으로 남북학계가 분리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체로 북한의 경우는 제1기 1945~1960, 제2기 1960-1993, 제3기 1993년 이후 현재로 분기 할 수 있고⁴⁾, 우리 학계의 경우 제1기 1945-1969, 제2기 1970-1986, 제3기 1987년 이후 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이순진, 장수진, 서국태, 석광준, 2001, 『大同江文化』, 평양, 외국문출판사.

3) 오강원, 2005, 「현대중국의 고조선연구와 그 맥락」; 장석호, 2005, 「기자조선에 대한 중국의 최근 입장과의 비판」 『중국의 한국고대사연구』, 고구려연구재단. 조우연, 2012,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연구와 그 비판에 대한 검토」 『고조선단군학』 26.

4) 북한학계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이기동, 권오영, 조법중, 노태돈, 오강원, 윤용구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하문식의 연구사적 정리가 상재된 바 있다. 하문식, 2006,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경향」, 『白山學報』 74.

북한의 경우 제1기는 고조선 요동설이 정설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민사학 또는 일제 관학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모색되던 시기이고, 제2기는 고조선 요동설이 확립되고 고고학적으로 이를 입증 연구하며, 나아가 요서지역의 비파형동검 관련유적과 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낙랑유적이 고조선의 체계로 흡수되는 시기이며, 제3기는 단군릉 발굴과 재조영 이후 고조선 평양설로 급선회하는 시기이다.

우리학계의 경우 제1기는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새로운 古朝鮮史像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시기이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앞 시기를 답습하여 여전히 문헌 고증 및 해석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2기는 고조선사 연구에 고고학과 인류학 이론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인류학과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고대사연구에 원용한바 있는 김정배의 일련의 연구는⁵⁾ 고조선사연구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3기는 북한학계의 고조선 및 고고학 연구 성과가 다수 소개되고 국내학계의 고조선사 연구도 주제와 방법론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⁶⁾ 1987년 발표된 북한학계의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⁷⁾는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비파형동검을 고조선과 연결시켜 고찰한 연구이다. 이것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조직된 각 전문 학회들의 연구발표회 개최 등에 힘입어 연구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진전을 보였으며, 연구 인력도 대폭적인 확충이 이루어졌다.

최근에 이르러 남북한은 물론 중국의 遼寧이나 內蒙古, 吉林省 등지에서 고조선과 관련된 유적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에 단편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文獻史料를 考古學의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보다 넓은 시각에서 체계화 할 수 있다면 고조선의 중심위치나 고조선의 국가적 발전과정에 따른 강역의 문제도 수수께끼의 베일을 벗고 그 윤곽이 밝혀 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염두에 두고 남북한 학계의 고조선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와 강역의 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5) 김정배, 1968, 「濊貊族에 관한 연구」, 『白山學報』 5; 1973,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출판부.

6) 윤내현, 1986, 『한국고대사신론』, 일지사. 우리학계의 연구사적 검토는 박선미, 2006, 「근대사학이후 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학보』 23, 참조.

7) 박진욱·황기덕·강인숙, 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 고조선사의 대상과 국가형성시기

1) 고조선사의 인식체계와 대상

고조선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체계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거나, 위만조선 이전의 단군조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3조선 모두를 고조선으로 보는 경우는 사료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방편이기는 하나 이럴 경우 고조선 국가의 정체성은 모호하게 된다.

반면 단군조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고조선을 단선적으로 이해하여 고조선의 국가체제를 신정국가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고조선이 우리민족 상고사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세운 최초의 국가라고 한다면, 고조선은 형성부터 멸망 시까지 2천년 이상 지속된 동일한 성격을 지닌 국가일 수는 없을 것으로 이를 모두 단군조선으로 이해 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과거에 제시되었던 檀君箕子·韓氏·濊貊衛滿 등은 사료적 의미를 지닐 뿐 古朝鮮史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회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는 되지 못한다. 고조선은 세계의 유수한 고대 문명국가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阿斯達’로 불리어진 初期國家로부터 출발하여 秦漢 등 중원의 統一帝國과 정면으로 맞섰던 ‘大古朝鮮王國’ 시대로 발전한 생동하는 구체적인 실체이다.

단지 시간적인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三國遺事』나 『帝王韻紀』의 체제에 따라 후조선(위만조선)⁸⁾ 이전의 조선을 고조선으로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동하는 고조선 사회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며, 고조선 국가의

8) 일반적으로 위만조선을 건국한 만왕은 위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동시대의 자료인 『史記』에는 “朝鮮王 滿은 故燕人이다.”라고만 되어있을 뿐 만왕의 성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司馬遷도 알지 못하였던 만왕의 성을 후대의 학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원래 滿이나 右渠 등은 조선에서 임금을 존칭하던 고유어의 借字 표기일 것인데, 조선의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중국학자들이 만왕을 중국계 유민으로 단정하고 후대에 동북지역에서 가장 흔한 중국계 성이었던 衛氏를 임의로 冠한 것으로 일종의 역사왜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왕이 세운 조선을 위씨조선으로 부를 수는 없으며, 만조선이나 후조선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위만조선을 병칭한다. (서영수, 1996 『위만조선의 형성과정과 국가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9)

성격이나 성장과정 및 강역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시대구분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동안 우리학계에서는 고조선사를 단군-기자(한씨, 또는 예맥)-위만조선으로, 북한학계에서는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필자는 통치자의 칭호와 사회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신정국가 시대의 통치자였던 단군왕검이 다스리던 단군조선(단군왕검-아사달사회, 성읍국가)- 신정이 분리된 후 韓(칸)으로 불리던 대군장이 지배하던 연맹국가시대인 한조선(칸-한예맥사회, 성읍연맹체 국가)- 왕호를 쓰던 영역국가시대인 고조선왕국(검, 왕-대고조선, 왕국)/ 후조선; 만(위만)조선으로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9) 다만 이러한 군장호칭의 변화를 통한 시대구분은 고조선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그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는 고조선연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일례이나 고조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고조선사의 시대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은 엄밀히 말한다면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던 우리가 세운 국가 중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고문화 전부를 고조선에 매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우리 역사의 지평을 좁히는 결과가 된다. 고조선 연구의 혼선은 일반인은 물론 학계에서조차 고조선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데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감안하여 고조선사를 선고조선시대-고조선 왕국(초기,중기,후기)시대-후(위만)조선 시대로 나누어 볼 것을¹⁰⁾ 다시한번 제안하는 바이다.

9)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및 199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 『동양학』 29. 필자의 이러한 시대구분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이 동시에 제기된 바 있는데(최성락, 1992, 「철기문화를 통해서 본 고조선」 『국사관논총』 33), 필자의 가설은 고조선사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그 대강을 제시한 것으로 각각의 시대가 갖는 사회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10) 서영수, 2005, 「고조선의 국가형성계기와 과정」 『북방사논총』 6.

2) 고조선의 건국시기

우리민족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하는 물음에 누구나가 아는 답이 있는데, 바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고 하는 대답일 것이다. 이는 모두 『三國遺事』 고조선조에 보이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시기를 염두에 둔 말이다.

즉, 『三國遺事』에서 '檀君의 개국은 중국의 堯임금 대와 같다.'고 한 이래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민족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오늘의 학계에서도 기원전 3,000년 기에 이미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보는 견해에서부터 기원전 4~3세기에 건국되었다는 대립되는 학설이 제기되었다. 즉, 북한 학계의 경우 이전에는 요동반도의 崗上,樓上유적을 통하여 노예제국가로서의 고조선 건국시기를 기원전 1,000년 기 전반으로 보아오다가,¹¹⁾최근의 북한학계는 檀君陵 발굴과 평양일원에 산재해 있는 14,000여기에 달하는 고인돌조사를 통하여¹²⁾ 고조선의 개국 시기를 기원전 3,000년기로 보고 있으며, 이를 발전시켜 대동강문화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3] 강동 단군릉과 문흥리 고인돌(2002,서영수)

11) 리지린, 1963.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2) 석광준, 2002, 『조선의 고인돌무덤연구』, 사회과학원:중심,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신석기 시대인 요서의 우하량 등 홍산문화 시기에 고조선이 건국되었으리라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가 희소한 시대를 무분별하게 해석한다면 고조선은 다시 구름 속에 묻힐 것이다. 예를 들면 紅山文化의 여신을 단군조선의 熊女로 해석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홍산문화는 고조선의 배경문화로 깊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그 자체가 고조선 국가의 문화는 아니다. 『삼국유사』에는 桓雄이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남하하여 웅녀로 대표되는 토착인과 결합하여 단군이 탄생하고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한다. 즉, 환웅은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영웅이지만 기원전 3천년 기에 해당되는 홍산문화보다는 1천년이나 이후의 인물이다.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문화는 홍산문화를 계승하여 기원전 2천년 대에 개화하기 시작한 하가점하층문화이다. 따라서 환웅은 홍산문화 여신의 먼 후손으로 환웅이 남하하여 결합한 웅녀가 환웅의 먼 조상인 홍산의 여신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림 2] 우하량 4지점 금지탑, 또는天壇(지름 100M, 2004,서영수)

우리학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중국 동북지역 및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비파형동검문화를 토대로 조선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관자』의 기술에 의거 기원전 8~7세기

경으로 보는 견해와 『위략』의 조선후가 칭왕하는 기원전 4세기 이후나 기원전 3~2세기경 건국된 위만조선을 최초의 국가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이와는 달리 국가형성시기를 소급하여 단군조선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의 변환단계에 성립한 것으로 보거나¹³⁾, 遼寧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 하가점상층문화, 비파형동검문화 등 청동기 문화에 주목하여 殷周유민이 동래한 기원전 1100년경이나¹⁴⁾ 요동지역에서 청동기문화가 개화한 기원전 1,500년기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에 이르렀으나.¹⁵⁾ 충분히 검증된 견해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조선사회의 중심으로 상정되는 지역에서 중심 도성이나 대읍의 유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 평양이나 삼한지역에서 다수의 토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의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면 그 외형적 형태도 밝혀지리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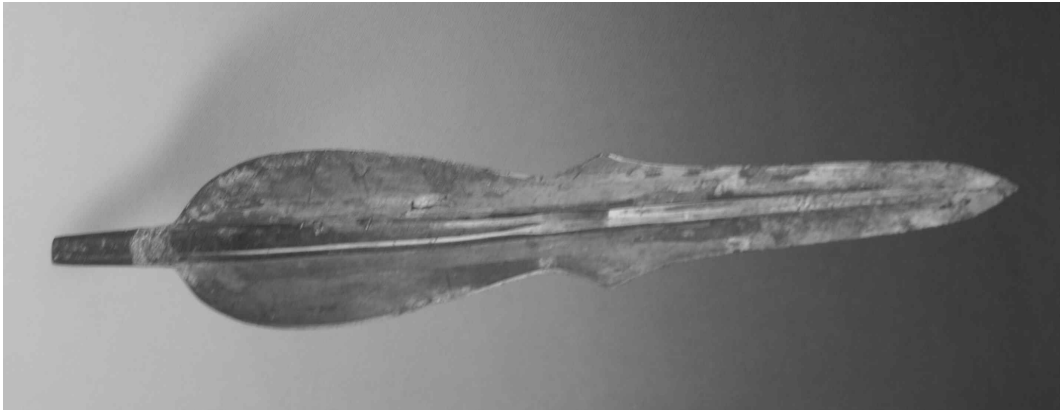


[그림 5] 적봉 삼좌점 성터(하가점하층문화, 2006, 서길수)

13) 김정배, 1986,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 출판부.

14) 이종욱, 1993, 『고조선연구』, 일조각. 서영수, 1999, 앞의 글.

15) 한창균, 1992,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서론」 『국사관논총』 33.



[그림 6] 십이대영자 2호묘 출토 비파형동검



[그림 7] 조양 십이대영자 3호묘 출토 다뉴경

3.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와 강역

1) 중심지의 위치

고조선사중에서도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때로는 고조선의 중심을 大同江유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遼東으로 볼 것인가 하는 역사지리적 논쟁이 학문적 차원을 떠나서 애국심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대체로 대동강중심설, 요동중심설, 이동설로 대별된다.¹⁶⁾

大同江중심설은 종래 우리 학계의 오래된 통설인 데, 이러한 설에 동조하는 경우 마치 식민사관에 젖은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日本官學者들이 고조선의 중심을 大同江 유역으로 고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해 우리역사의 무대가 半島로 축소·왜곡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고조선의 중심을 대동강 유역으로 보기 시작하였던 것은 高麗 시대부터이며, 朝鮮 시대에 들어와 보다 체계화되어 오늘의 학계에 계승된 것이다.

최근 북한학계도 그간 주장하였던 요동중심설을 포기하고 대동강 중심설로 선회하여,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를 요동으로 보기 시작한 우리학계와는 입장이 전도되기에 이르러 고조선사 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요동중심설의 경우 북한학계의 견해가 1980년대에 우리학계에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일반인에게 가장 환영받는 학설로 고조선은 건국기부터 멸망기 까지 그 중심을 요동 지역에 두었다는 것이다. 이 설은 1920년대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어 오늘날 고조선의 중심을 만주 지역으로 주장하는 경우, 마치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한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고조선의 요동중심설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며,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이를 계승하고, 6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 대동강중심설로 선회하기 이전까지 북한학계의 주류를 이루던 학설이

16) 서영수, 1988. 앞의 글.

다. 요동중심설을 신봉하던 북한학계가 오히려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조차 대동강 지역으로 봄에 따라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를 요동지역으로 보기 시작한 우리학계와 입장이 전도되기에 이르러 단순한 의미에서의 요동중심설은 폐기된 견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요녕지역의 고고학적 성과와 북한학계의 요동중심설에 자극을 받아 우리학계의 경우도 琵琶型銅劍, 多紐紋鏡, 美松里型土器, 지석묘등 고고학적 유물의 분포와 문헌사료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에 있었으나 43세기경에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이른바 移動說이 제시되어 80년대 이후 대표적인 견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¹⁷⁾ 그러나, 대동강 중심설도 생명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¹⁸⁾

다만 오늘의 학계에서 고조선의 중심지 비정이 차이를 갖게 된 것은 과거 연구와는 달리 단순히 위치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고조선을 국가로 생각할 때 그 국가의 물질문화의 기반이 무엇이며, 어느 단계의 문화를 고조선국가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17) 이동설은 신채호를 필두로 천관우, 김정학, 김정배의 선구업적이 뒤를 이었으며, 80년대 이후 서영수, 노태돈, 이종욱의 연구에서 보다 체계화되었다.(서영수, 1988, 앞의 글. 노태돈, 1990, 「古朝鮮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서울대國史學科. 李鍾旭, 1993, 앞의 책. 한편 이동설을 민족 자생설의 입장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이동이란 동일 민족의 활동무대 내부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만을 우리민족의 무대로 생각하는 경우 대흥안령이나 요동에서 대동강이나 한강유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異民族의 이동이 되겠지만 우리민족의 역사적 활동무대를 요동은 물론 대흥안령 일원까지로 보는 경우 단지 민족사 내부의 중심지 이동이 되는 것이다.

18)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표1] 고조선의 중심지 비정과 강역에 대한 견해¹⁹⁾

	학자	주장	문헌	비고
대동강 중심설	이병도	대동강을 중심으로 성립, 강성할때는 요하를 경계로 동호·연과 인접(溟水=청천강, 列水=대동강, 滿潘汗=박천강일대)	『三國遺事』, 『東國通鑑』, 『東國輿地勝覽』, 『東史綱目』, 『星湖集』, 『史記索隱』 薛瓚云, 『漢書』 地理志, 『括地志』 등	「溟水考」, 1933/『한국고대사연구』, 1983.
	송호정	고조선의 중심지는 처음부터 대동강이었음(溟水=청천강)		『고조선 국가형성과정 연구』, 1999
요동 중심설 (遼寧說)	신채호	하얼빈 일대에서 단군조선 흥기, 만주 일대를 아우름(溟水=遼寧 해성근처 軒芋灤, 滿潘汗=遼寧 양평)	『應制詩註』, 『東國通鑑提綱』, 『疆界考』, 『東史』, 『史記集解』, 徐廣云 등	「檀君時代」, 1908(1972, 전집)
	정인보	백두산-송화강일대에 단군조선 흥기, 요동방면까지 영역 확대(溟水=遼寧해성근처 高麗河, 沛水=大凌河)		「한국사연구」 상, 1946 (1983, 全集)
	윤내현	灤河를 西邊으로 하다가 秦開침략으로 大凌河까지 후퇴, 北邊은 길림성 일대, 南邊은 한반도 전체(溟水=灤河, 列水=灤河)		「韓國古代史新論」, 1986/「古朝鮮研究」, 1995
중심지 이동설	천관우	요서→요동→대동강으로 箕子族團 東來	『史記』, 『三國志』, 「염철론」, 등	「韓國古代史新論」, 1986/「古朝鮮研究」, 1995
	서영수	초기 西邊은 大凌河, 秦開 침략 이후 대동강변으로 이동 (溟水=渾河, 洌水=遼河, 列水=대동강, 滿潘汗=千山山脈 서남)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1988
	노태돈	요동 중심에서 秦開 침략이후 한반도로 이동(溟水=압록강, 列水=대동강, 滿潘汗=어니하·청하하류와 성수산을 잇는 일대)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1990

19) 박선미, 2006, 앞의 글 41쪽 표5.

최근 요서와 요동 지역의 청동기 문화와 복합사회의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있어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도 이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고조선 강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논의는 무성하였으나 문헌사학과 고고학적 연구가 별개로 이루어진 탓에 그 성과는 생각보다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고조선 중심지와 강역의 문제는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정밀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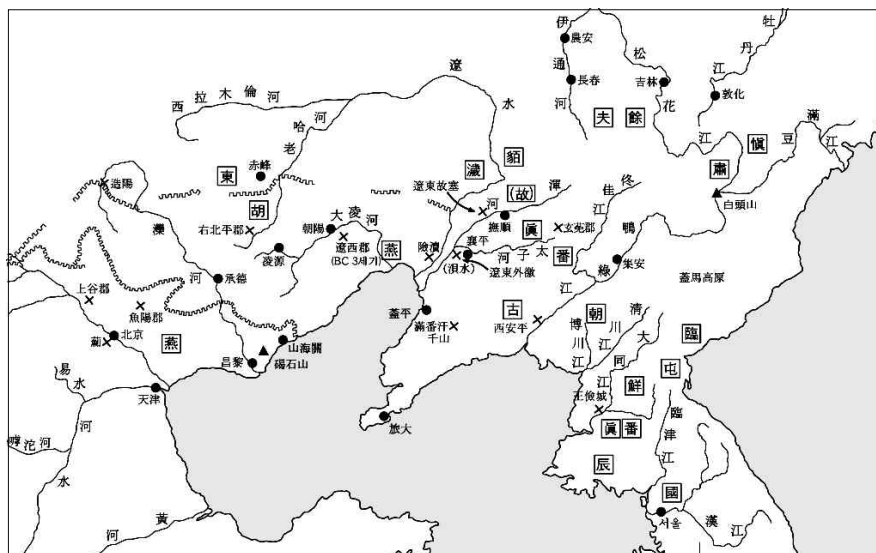
[그림 8] 요동 개주 석봉산 고인돌.

2) 강역의 범위

고조선의 중심위치 못지않게 고조선은 얼마나 큰 나라였을까 하는 점이 일반인의 관심거리다. 고조선은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였는가, 아니면 로마와 같은 대제국이었는가? 일부에서는 고조선은 출발부터 광활한 영역을 지배하였던 국가라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역의 크기는 그 사회의 문화수준과 사회구성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군왕검이 다스리던 아사달 사회는 아사달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성읍국가였을 것이지만 현재 그 위치나 영역의 크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기원전 8~7세기경에 제와'조선'국명으로 교역을 하던 고조선 왕국시기에 이르면 어느 정도의 강역을 형성하며 발전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서쪽은 연과 동호, 동쪽은 숙신, 임둔, 북쪽은 부여, 남쪽으로는 진국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 안에서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그림 7] 고조선 강역도(기원전 7~3세기)

4. 고조선 강역의 변동

고조선은 건국기부터 멸망기 까지 동일한 지역에서 성장 발전하던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영역의 변동이 심하였다. 그 대강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20) 현존하는 사료를 통해 고조선의 강역을 정확히 추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고조선왕국과 교섭하였던 주변 제국의 위치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전성기 고조선의 강역은 대체로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대凌河유역에서 東胡와 만나고, 남쪽으로는 大同江 유역을 경계로 辰國과 이웃하며 북쪽과 동쪽으로는 예맥부여진번 임둔숙신과 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 연과의 전쟁 및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

동아시아에 철기가 보급되는 전국시대에 들어와 고조선은 연과 각축하게 되는데, 기원전 3세기 초 연나라의 침공으로 서쪽 1천여 리의 땅을 상실하고 그 중심지를 대동강유역으로 옮기게 된다.

고조선과 대립하고 있던 연의 동방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연의 전성기인 昭王때(B.C.311~279)이다. 『사기』조선전에는 “燕나라의 전성기에 처음으로 眞番·朝鮮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障塞(長城과 要塞)를 쌓았다.”²²⁾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기』와 『위략』, 『鹽鐵論』의 고조선 관계 기사를 종합해보면, 燕이 장군 秦開를 파견하여 동쪽으로 東胡와 朝鮮을 치자 결국 고조선은 연에게 패하여 滿番汗에 이르는 서쪽 땅 1천리를 상실하고, 요동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유일한 자연계선인 천산산맥을 경계로 연과 대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³⁾

여기에서 『사기』조선전의 燕이 복속시켰다는 朝鮮은 古朝鮮 전체가 아니라 고조선 영토의 일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거꾸로 추정하면 B.C.3세기 이전 고조선의 강역은 서쪽으로 대릉하 유역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고조선은 대동강유역으로 중심지를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1) 이 부분은 기왕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그 대강을 설명하였다. 서영수, 1999, 「고조선의 대외 관계와 강역의 변동」, 및 2007,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고조선사연구회편, 학연문화사.

22) 『史記』卷115「朝鮮傳」第55 “自是至燕時，嘗略屬眞番 朝鮮，爲置吏，築障塞。”

23) 상국에서 요동에 이르는 지역에 5군을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燕의 요동진출 지역이 이와 같이 모호하게 기술된 것은 사실상 燕代에는 아직 요동에 대한 군현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한서』 지리지에도 요동군은 진대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즉, 연은 전성기인 소왕이후 국력이 쇠퇴하여 원거리의 군현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원래 연의 5군도 후대의 한군현처럼 광역의 행정구역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사보급로를 잇는 일종의 군사적 목적의 요새지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세죽리-연화보유적을 근거로 요동에 진출한 연의 세력이 점차 청천강유역에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노태돈, 1990,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23), 당시 중국내부에서 연이 처한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8]. 연진장성(요서건평 張家灣, 2005,서영수)

2) 秦의 동방진출과 고조선

통일제국 진이 등장하자 고조선은 진과 요동을 두고 맞서게 되었다. 『사기』에는 진의 동방진출에 대해 “진이 연을 멸한 뒤 (연이 공취한 진번과 조선의 고토를 새로 건설한) 遼東外徼에 속하게 하였다.”²⁴⁾고 기술하였으며, 『위략』에는 당시 고조선의 조왕이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복속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한다.²⁵⁾ 그러나 고조선이 중원의 통일제국 진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내 朝會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당시 고조선의 국력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도 이러한 고조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진출을 포기하고 고조선으로부터 새로 빼앗은 땅에 『사기』의 표현대로 상하장이라는 이중의 요새를 쌓아 고조선의 반격에 대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고조선은 이러한 과정에서 연과의 경계선인 요동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고조선이 진에게 상실한 영역은 대체로 만변한, 즉 천산 산맥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땅으로 보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24) 『사기』권115, 「조선전」55, “秦滅燕,屬遼東外徼,一滿亡命,渡淇水,居秦故空地上下障.”

25) 『三國志』권30「위서동이전」 「韓傳」所引『魏略』“及秦兵天下,使蒙恬築長成,到遼東.時朝鮮王否立,畏秦襲地,略服屬秦,不肯朝會”

3) 고조선의 요동수복과 한제국과의 대립

진의 요동진출에 따라 고조선은 연과의 경계였던 만변한 이동의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압록강 선으로 후퇴하여 진에 대한 유화 외교정책을 구사했으나, 고조선이 증원 세력에 맞서 항상 후퇴만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진한의 교체와 흉노의 등장에 따른 대륙정세를 이용하여 고조선은 한초에 압록강이 서의 요동의 고토 일부를 수복하고 다시 對漢 강경외교책으로 전환하였다. 『사기』에는 “한이 건국하여서는 그 곳(진의 요동외요에서 관할하던 지역)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故塞를 수리하고 溟水에 이르는 곳 까지를 경계로 삼아 연(한 후국)에 소속시켰다.”²⁶⁾라고 하여 한초에 진대에 점령하였던 고조선 지역이 거리가 멀어 연(전국시대)이 설치한 요동의 옛 요새를²⁷⁾ 수리하여 패수에 이르는 지역만을 연 후국에 속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문면 그대로 거리가 멀어 후퇴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에 의해 진대에 건설하였던 요동외요가 함락되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중국적 표현에 불과하다.

『염철론』의 “조선이 徼(秦의 요동외요)를 넘어 연의 동쪽 땅을 強取하였다.”²⁸⁾는 기록에서 고조선이 진한 교체기인 B.C.208~202년 사이에 패수동쪽에 진이 새로 설치한 국경 요새인 요동 외요를 유린하고 진에게 상실했던 패수이동의 땅 즉, 연(한 후국)의 동쪽 지역을 탈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흉노의 공세를 막기에 급급하였던 건국초의 한으로서 자연계선인 패수에 의지하여 옛(전국시대) 연의 영토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고조선은 요동의 패수를 경계로 한과 침예한 대립관계로 들어 가게 된다. 『前漢紀』에도 당시 한이 요동지역으로 후퇴하고 요수(소요수)를 국경으로 삼은 정황을 전해 주고 있다.

고조선과 한의 국경이었던 ‘패수’를 청천강이나 압록강에 비정해 왔으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패수’는 한이 진의 요동외요에서 연의 요동고새로 후퇴한 뒤의 국경

26) 『史記』권115 「朝鮮傳」 “漢興，爲其遠難守，復修遼東古塞，至溟水爲界，屬燕。”

27) 漢興이란 한의 건국초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건국초의 옛요새란 한이 건설한 요새가 아니다. 「조선전」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연의 장새와 진의 외요뿐이다. 새와 요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요동고새는 곧 연의 장새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8) 『鹽鐵論』권7 「備胡」 제38 “朝鮮踰徼，劫燕之東地。”

이므로 요동지역의 강일 수밖에 없으며, 이 점은 최근에 발견된 <천남산(泉南産)묘지>의 ‘옛날에 동명은 하늘의 기에 감응하여 태어나 사천을 건너 나라를 세웠으며, 주몽은 해를 품어 태어나 溟水에 임해 나라를 열었다’²⁹⁾라는 기록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후한시기의 요수 명칭은 대체로 소요수와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의 패수는 오늘날의 渾河에 비정된다.



[그림 9] 북한의 청천강(2002,서영수)



[그림 10] 패수로 추정되는 무순의 혼하

29) “君諱男產，遼東朝鮮人也。昔者東明感氣，踰廬川而開國，朱蒙孕日，臨溟水而開都。… 君其後也。”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고조선의 강역 변동의 추이를 조감하였는데, 이처럼 고조선은 일정한 지역에서 정체된 국가이거나 시종일관 광역의 지역을 지배한 국가가 아니라 변화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세에 따라 그 강역이 변동한 생동하는 구체적 실체이다.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위만조선과 낙랑군

1) 철기문화의 수용과 위만조선

철기가 청동기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은 히타이트(Hittite) 제국(기원전 1450년~기원전 1200년) 때부터이며, 동아시아세계에 있어 북방 초원 지역은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 기원전 7~6세기경, 중원대륙은 춘추말 전국초인 기원전 5세기 전후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기문화의 수용루트는 북방초원, 전국시기의 중국, 아무르강에서 두만강유역에 이르는 빨체, 크로우노프카 등으로 이론상으로는 기원전 5~4세기 경 고조선이 칭왕하고 연과 각축을 하던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대체로 기원전4~2세기로 보고 있다.

북한의 경우 세죽리유적의 명도전 출토, 위원군 용연동, 영흥군 소라리 토성의 철기 등을 근거로 서북한의 철기사용 개시를 늦어도 연의 철기시대 개시와 대체로 대응될 것으로 보고 있다.³⁰⁾ 최근 우리학계도 새로운 발굴성과를 토대로 그 상한 년대가 올라가는 중이다.

이러한 시기에 고조선왕국의 이동과 붕괴에 이어 후조선(위만조선)이 성립되었다. 고조선사 연구가 혼선을 빚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고조선과 위만조선을 독립된 역사체로 구분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막연히 고조선으로 이해한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

30) 정백운, 1958, 「우리 나라에서 철기 사용의 개시에 관하여」, 『문화유산』 3, pp.52-58.

러한 이유로 『史記』 등 비교적 확실한 문헌 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만조선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 온 것은 주로 건국자인 위만(만왕)의 출자와 관련하여 그 국가가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인지, 아니면 식민정권인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위만조선을 세운 만왕을 고조선계 유민으로 보는 견해와³¹⁾ 한계 연인으로 보는 견해가³²⁾ 대립되어 왔으며, 극단적으로 만왕을 殷의 후예로 보거나³³⁾ 아예 한국사의 주류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³⁴⁾ 최근에는 위만조선의 도성인 왕검성을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인 환인 등지에서 찾는다던지,³⁵⁾ 그 교역체계³⁶⁾, 정치구조³⁷⁾ 및 대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³⁸⁾ 나오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사기』〈조선전〉의 기사를 재음미해보면 만왕의 출자와 관련하여 『사기』에는 ‘조선왕 滿은 故燕人이다.’라는 단한줄의 기사가 있는데, 이 사료에 나오는 ‘故’자는 원래 古(옛)와 本(본래)의 뜻이 있으나 사기에서는 ‘옛(古)’의 뜻으로만 사용되었다. 즉 만왕은 전국시대 연이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후퇴하였던 요동 지역에서 세력을 키운 인물로 ‘故燕人’이란 사마천이 漢 侯國의 연인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따라서 만왕은 한 후국의 연왕 노관과는 무관한 인물이며³⁹⁾, 단순한 망명객이 아니라

31) 이병도, 「위씨조선흥망고」, 『한국고대사연구』, 1976.78~82쪽.

32) 三上次男, 「衛氏朝鮮の政治, 社會的性格」(『中國古代史の諸問諸』, 1954;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1966)

33) 김철준, 「고조선연구의 회고와 전망」, 『제1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34) 윤내현, 「위만조선의 재인식」(『사학지』19, 단국대 사학회, 1985; 앞의 책, 1986).

35) 김남중, 2001, 「위만조선의 영역과 왕검성」 『한국고대사연구』 22

36) 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화폐』, 학연문화사.

37) 노태돈, 1998 「위만조선의 정치구조」 『산문사학』, 8. 송호정, 2002, 「위만조선의 정치체제와 삼국초기의 부체제」. 『국사관논총』, 98.

38) 조법중, 2000, 위만조선의 대한전쟁과 항한제후국의 검토, 「선사와 고대」 14.

39) 일반적으로 ‘만왕이 연왕 노관이 흉노로 도망갈 시에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조선으로 망명하였다’는 기사에서 만왕을 노관의 부하로 이해하여 왔는데(이병도, 위씨조선흥망고), 이는 사기가 기전체 사서리는 점을 간과하였던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왕은 왜 노관이 흉노로 도망갔던 시기에 조선으로 망명하였을까? 사기는 紀傳體 사서로 모든 기사를 한군데 몰아서 기술하지 않는다. 여후 본기, 노관열전을 보면 한고조의 친구인 노관이 고조의 문병차 장안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한고조의 부음을 듣고 흉노로 도망가자 이에 여후가 대노하여 대군을 파견하여 노관의 진당을 소탕케

요동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미 상당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거느리던 고조선계 인물로 보인다.⁴⁰⁾ 단순한 망명객과 일정한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던 정치집단의 성격은 물론 다를 것이다.

만왕의 출자가 漢계인지 고조선계인지 그리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위만조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이며, 만왕의 등장 시기도 대략 2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위만조선의 세력기반과 관련하여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명도전(明刀錢) 등 동북아 고대 화폐유적을 재검토하여 위만조선이 중원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辰國) 사이에서 완충교역을 수행한 교역국임을 지적한 박선미의 연구가⁴¹⁾ 주목된다. 우세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운 위만세력은 대동강유역의 토착문화인 세형동검문화를 흡수 발전시켜 성장하였으며, 어느 정도 관료제를 갖춘 국가로 생각된다.⁴²⁾

이처럼 위만조선은 중국 사서에 처음으로 입전되어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으나, 한제국과의 전쟁과정에서 멸망하고 그 자리에 낙랑군이 자리 잡은 까닭에 그 간의 연구에서는 그 국가의 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중국 측의 입장을 전한 『사기』에서 조차 전성기 위만조선의 강역을 ‘방수천리(方數千里)’의 대국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만조선이 한제국과 맺은 외교와 흉노와의 군사적 제휴, 한제국과의 전쟁과정 등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 사회에서 위만조선이 보여주었던 국가적 위상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고 그 군세가 요동에까지 미치었다고 한다. 이에 요동지역에서 웅거하던 만왕이 조선으로 망명하였던 것인데 조선전에는 이러한 사실이 생략되었을 뿐이다.

태사공자서에도 ‘燕丹散亂遼間, 滿收其亡民’이라하여 만왕이 세력을 형성한 시점을 기술하였는데, 즉, 본전의 ‘故燕人’과 종합해보면 만왕은 전국말엽에 요동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한 인물로 한인인 노관과는 무관한 사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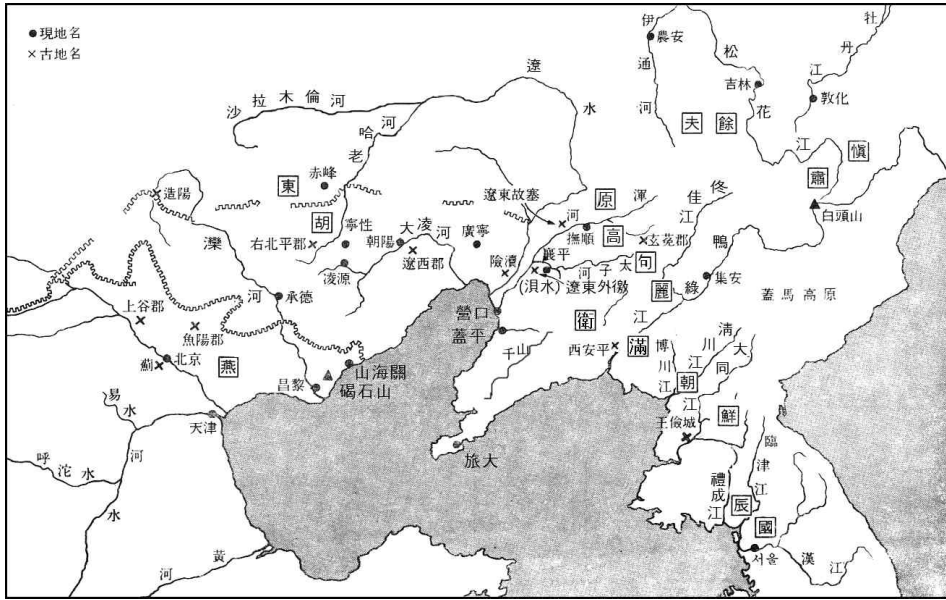
40) 서영수, 1996, 『위만조선의 형성과정과 국가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9.

41) 박선미, 2009, 앞의 책.

42) 북한학계는 청암리 토성을 왕검성으로 보고 있으나(남일룡, 1999, 『대동강유역 고대 성곽의 성격』, 조선고고연구), 현재 확실한 유적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림 11] 평양성 을밀대(2002)



[그림 14] 위만조선 강역도

2) 낙랑군의 위치와 성격

한국고대사의 발전과정에서 낙랑군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낙랑군을 비롯한 한군현에 대한 연구는 군현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무성하였을 뿐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존재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여⁴³⁾ 한군현의 문제는 오히려 한국고대사의 사각지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낙랑군을 비롯한 한군현의 지배력과 통치 범위를 과대평가하여 한반도 북부 전역이 군현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 日本 官學의 역사왜곡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군현의 성립이 한국사를 단절시킨 것으로 오해하여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군현의 소재지를 遼東과 遼西에 위치한 것으로 보거나 아예 한국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간헐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⁴⁴⁾ 주지하다시피 고조선 말기의 중심지와 이를 계승한 위만조선의 중심지가 大同江 유역의 확실하므로 이러한 견해는 성립되기 힘들다.

타울성사관에 입각하여 한군현의 지배력과 세력의 범위를 사실 이상으로 확대하여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비판되어야 마땅하나, 이에 단선적으로 대응하여 낙랑군을 비롯한 한군현을 한반도 밖에서 찾음으로써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도 정당한 이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고조선의 요동중심설을 끈질기게 주장하였던 北韓學界의 경우 이를 포기하고 대동강 중심설로 급선회하고 있으며 요동중심설을 주장하던 우리학계의 일부 학자들도 여기에 동조하여,⁴⁵⁾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를 요동으로 보기 시작한 우리학계와는 입장이 전도되기에 이르러 고조선사 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낙랑군에 대한 견해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견해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43) 한군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 논고로는 김원룡, 「삼국시대 개시에 관한 일고찰-삼국사기와 낙랑군에 대한 재검토」(『동아문화』 7,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67); 권오중, 앞의 책 등 몇 편에 불과하다.

44) 리지린, 『고조선사연구』, 과학원 출판사, 1963. 윤내현, 『한국도대사신론』, 일지사, 1986.

45) 이에 대한 학술사적인 검토는 오강원, 「최근 제기된 북한학계의 고조선=평양설에 관하여」(『백산학보』 46, 199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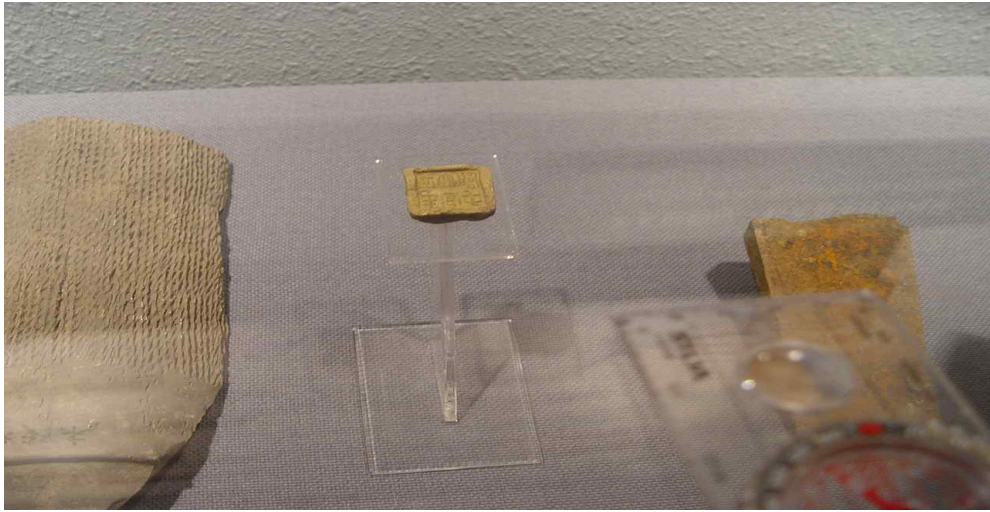
[그림13] 대동강 남안에 재조영한 낙랑고분(2002,서영수)



[그림 14] 낙랑전축분 내부,,2002)

위만조선 성립기의 한국고대사회에는 조선만이 유일한 국가였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위만조선의 붕괴가 곧, 한국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위만조선기에는 이미 성장을 시작한 한예맥의 제국가의 압력과 중국내부의 사정에 의해 한군현의 토착사회에 대한 지배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으며 세력의 범위도 생각보다 그렇게 컸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사에서 한군현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오히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고대사의 발전과정의 입장에서 그 성격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제국과 위만조선의 전쟁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사기』 「조선전」을 재음미해보면 한과 조선의 전황이 한제국에 유리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었으며, 전쟁 이후에도 한제국 자체의 재정적 위기와 한·예맥사회의 성장으로 위만조선 중심부에 대한 군현지배도 순조로웠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이 처음부터 위만조선의 전 지역을 토대로 질서 정연하게 군현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한군현 설치와 관련된 사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漢四郡으로 통칭되던 한군현 중 진번군과 임둔군의 경우는 한서 지리지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활동하였던 군이 아니라 도상의 계획이거나 낙랑의 동부도위와 남부도위로부터 거꾸로 추출된 후대의 사료적 윤색에 불과한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46)



[그림 17]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임둔태수장' 명문이 있는 봉니(오녀산성 박물관) ?

따라서 한이 위만조선을 평정하고 설치한 군현으로 확실한 것은 四郡이 아니라 낙랑군뿐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낙랑군의 명칭과 군현설치 초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짙어진다. 일반적으로 한군현은 위만조선의 토착사회를 단위로 하여 설치되었던 것으로 믿어왔다. 진번과 임둔 물론 고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나라이름으로 위만조선에 이르러 조선에 편입된 지역이며, 현도군의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구려의 도읍성인 '丸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⁴⁷⁾

그러나 낙랑군의 경우 '진번·임둔'과 달리 위만조선 붕괴 이전에는 지역이나 국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낙랑이 '나라'를 의미하는⁴⁸⁾ 보통명사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낙랑은 중국사서에 산견되는 '조선낙랑(朝鮮樂浪; 조선나라), 낙랑조선(樂浪朝鮮; 나라조선)'에서 알 수 있듯이 '위만조선'자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다른 군현의 명칭과는 성격이 다르다. 만약 한군현이 지역단위로 편제된 것이라

46)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 요서의 錦西 邵集屯에서 '임둔태수장' 명문이 있는 봉니가 수습되었다고 한다. (복기대, 2001, 『임둔태수장 봉니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 『백산학보』 61.) 따라서 이 명문 봉니가 진품이라면 임둔군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으나 봉니가 발견된 지역이 곧 임둔군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7) 이병도, 「현도군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189쪽.

48) 이병선,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형설출판사, 1982, 152~153쪽.

면 이러한 명칭을 군현명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이 처음부터 위만조선의 전 지역을 토대로 질서 정연하게 군현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⁴⁹⁾

낙랑군은 중원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본국에서 태수가 파견되어 군현적 성격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중국내부의 사정과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 등 동아시아의 변화에 따라 본국의 지원이 자주 끊기게 되어 중국계 유이민의 자치도시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보다 많았으며, 군현지배의 경우에도 초기를 제외하면 광역의 지역을 통치하였다기 보다는 대동강 남안과 황해연안을 중심으로 한 조계지의 성격에 불과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중원세력의 팽창에 따라 군현적 기능을 갖는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토착사회를 지배하였다기 보다는 土着 國邑과의 이원적 질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보통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토착 국읍의 樂浪王이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崔理의 낙랑국 등이 바로 그러한 토착왕국이다. 일부에서는 최씨 낙랑국의 존재를 이유로 낙랑군을 요동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나, 로마제국의 유다왕국 지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민지 군현과 토착국읍은 오히려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한반도에서 낙랑·대방 등의 중국 군현이 소멸한 이후에도 중국사서에 낙랑·대방·현도·요동 등의 군현 명칭이 보이고 있어 이를 토대로 일부 학자들이 낙랑군의 원래 위치를 한반도 밖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북조시대의 중국사서에 보이는 낙랑등 동방 군현은 원래 그 지역에 설치되었던 군현이 아니라,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중국 내지로 이치되어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북방 오호국가의 종실적 군사봉건제하의 僑州와 虛郡으로 한국사와는 전혀 무관한 존재이다.⁵⁰⁾

최근 북한에서 대동강 남안에서 발굴한 〈초원 4년명 현별 호구부〉를 공개하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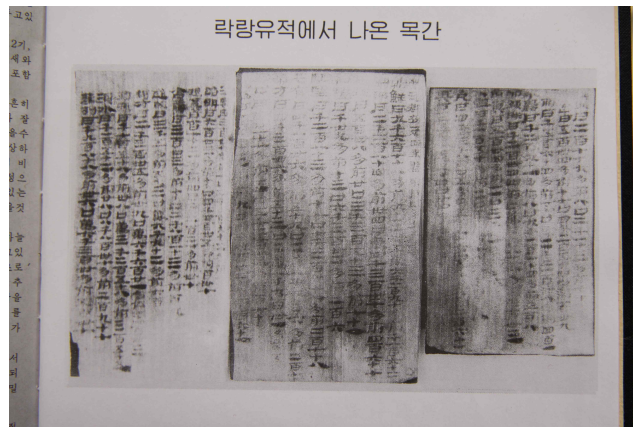
49) 서영수, 1996, 앞의 글

50) 서영수, 1998, 「대외관계사에서 본 낙랑군」, 『사학지』 31.

데, 여기에는 한서지리지의 낙랑 25개 속현이 모두 등장하고 있어⁵¹⁾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다만 낙랑군을 비롯한 한군현은 고구려와 백제를 축으로한 韓濊 societies의 급속한 성장으로 한국고대사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이 그리 높았던 것이 아니므로 낙랑군의 출현과 존속기간을 곧 한국사의 단절로 인식하였던 종래의 제 견해는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군현이 설치되었던 지역에는 다수의 중국계 유이민이 흡수되어 이들을 통하여 대륙의 선진 문화가 한국고대사회 전역에 중개되었던 까닭에 이후 한국사의 전개에 미친 문화사적 의의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낙랑을 비롯한 한군현의 문제는 단순한 위치논쟁보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낙랑인’이라는 개념에 주목해 낙랑군을 종족융합의 공간으로 해석한 오영찬의 연구가 주목된다.⁵²⁾



[그림 16] '初元四年 縣別 戶口簿' 木牘

51) 손영중, 2006, 「낙랑군 남부지역의 위치·'낙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다소'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199. 윤용구, 2007, 「새로 발견된 낙랑목간·'낙랑군 초원사년 현별 호구부, 『한국고대사연구』 47.

52)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고조선계와 한(漢)계의 종족 융합을 통한 낙랑인의 형성)』, 사계절. 이 연구에 대한 서평으로 김병준, 「'낙랑군 연구의 새로운 이해 틀, '낙랑인」(2007, 《한국고대사연구》 48), 이 참고가 된다.

〈참고문헌〉

- 리지린, 1963,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 김정배, 1973,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출판부.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천관우, 1989,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 권오중, 1992, [낙랑군연구], 일조각.
- 이종욱, 1993, [고조선사연구], 일조각.
- 윤내현, 1986, [한국고대사신론], 일지사.
- 노태돈편, 2000,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 문화], 청계.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고조선계와 한(漢)계의 종족 융합을 통한 낙랑인의 형성], 사계절.
- 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화폐], 학연문화사.
- 서영수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학연문화사, 2007.(공저)
- [고조선사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2009.(공저)
-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한국사시민강좌]2,1988.
- 〈위만조선의 형성과정과 국가적 성격〉[한국고대사연구]9,1996.
- 〈대외관계사에서 본 낙랑군〉[사학지]31,1998.
-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동양학]29, 1999.
- 〈민족사의 원류를 찾아서〉[한국고대사연구]28, 2002
- 〈고조선과 우리민족의 정체성〉[백산학보]65, 2003.
- 〈고조선의 국가형성의 계기와 과정〉[북방사논총]6, 2005.
-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백산학보]76, 2006.
-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 · 현도군 연구]동북아역사재단, 2008.
- 〈사기 고조선사료의 구성분석과 신해석〉[단군학연구]19, 2008.

고구려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구려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우리는 ‘역사왜곡’이라 하면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형성, 발전되어 우리 민족에게 주입된 ‘식민사관’을 떠올렸다. 그런데 2002년 중국에서 이른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중국에 의한 한국고대사 왜곡문제를 함께 연상하게 되었다.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온 만큼 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정노력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동북공정’의 경우 2003년 말부터 2006년까지 학계, 언론, 일반인들의 우려가 집중되었으나 그 이후 점차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식민사관’보다 ‘동북공정’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역사왜곡이 그 범위나 정도 면에서 더 심각한 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은 어느 부분에서 서로 접점이 닿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일제의 식민사관 가운데 만선사관이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인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주변국의 우리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어떤지에 대해 짚어보려고 한다.

2. ‘滿鮮史觀’과 ‘東北工程’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1) ‘만선사관’에서의 고구려사 연구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것이 만선사관이다. 만주와 조선반도의 역사가 정치, 민족,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었다고 본 일제시기 일본학계의 역사관을 “만선사관”이라 한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과 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 등 동북 3省지역이 연합하여 추진한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을 略稱하여 ‘동북공정’이라고 한다. ‘만선사’는 특정지역의 역사를 일컫는 용어이고, ‘동북공정’은 연구프로젝트 이름이므로, 이를 같은 항목으로 두고 논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滿鮮史觀’과 ‘東北工程’에서의 고구려사 인식」이란 논제를 붙인 것은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관련 연구의 태반이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특정 관점 아래 역사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만선사관’과 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인식을 ‘동북공정식 인식’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이 글에서는 편의상 ‘동북공정식 인식’이란 의미로 ‘동북공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한다.

만선사 연구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산하 만선역사지리조사실 소속의 白鳥庫吉, 稻葉岩吉, 箭内互, 津田左右吉, 池内宏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했다. 白鳥庫吉이 ‘만선사관’의 선창자였고, 稻葉岩吉이 가장 주도적인 보급자였다. 白鳥庫吉에 의하면 ‘만선사’ 연구는 러일전쟁이 끝난 1905년부터 시작되었다. 즉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주창되기 시작하여 일본의 만주지배가 확립되기까지 계속 확대되었으며, 그 잔상은 1950년대 까지 남아 있었다.

‘만선사관’은 지역범위를 만주와 한반도로 한정된 가운데 그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했으나 두 지역의 역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결합된 것은 아니었다. ‘만선사관’에서는 한반도의 왕조는 대부분 만주지역에서 패배한 정치세력들이 세운 것

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역사는 후진적이고 열등했고, 만주의 역사는 선진적이고 우등한 것으로 보았다. 이런 시각은 조선반도가 대륙에 붙어 있고 해양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적인 경영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半島的 性格論, 또는 他律性論과 연결되어, 한국사의 성격을 만주사에 종속된 역사로 규정했다. 이런 점에서 만선사관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의 독립을 부정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한 식민사관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만선사연구의 내용이나 전개과정을 보면, '만선사관'의 보다 직접적인 목적은 조선역사의 종속성을 강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만주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해내는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선사 연구가 일본의 만주진출과 궤적을 같이 했다는 것, 만주 지리, 그 가운데서도 전략요충지 파악에 도움이 되는 고구려 城의 위치 및 隋唐의 침략루트 등을 많이 연구했다는 것, 정치적으로 중국과 만주의 대립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만주가 중국보다 북방지역과 더 긴밀했다고 강조한 것 등이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즉 만선사연구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일본의 만주지배를 위한 지역조사 겸 명분축적이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진 만선사연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연구대상이 고구려사였다. 고구려는 만주와 조선반도를 포함한 영역에 성립되어 중원왕조와 당당히 대결했던 나라였다. 따라서 한반도를 기반으로 만주지배와 중국진출을 도모하고 있던 일본에게 고구려사는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만선사관'에서의 고구려사 연구는 다음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먼저, 고구려와 중원왕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현도군을 비롯한 한사군 및 隋·唐과의 전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주로 唐軍의 행군경로, 戰線과 전투가 진행된 고구려 城의 위치 등에 대한 역사지리적인 고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방패역할을 한 나라로서 고구려가 부각되었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요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구려사를 통해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한반도의 안정적인 지배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만주지역의 확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종족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만선사관'에서는 '고구려족'

을 만주민족의 일부로서 부여족의 일파라고 보았다. 漢代 이후 만주에는 挾婁族과 扶餘族이 나타났는데, 高句麗族은 부여족에 속하며, 종족적으로 한반도 중남부의 韓人, 또는 일제시대 韓民族과 구별된다고 했다.

그리고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확장한 영역 및 백제, 신라와의 전쟁과 境界에 대한 지리적 연구를 많이 했고, 그를 통해 백제와 신라에 대해 고구려가 압도적인 위상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했다. 廣開土王碑 분석을 통해 북방의 고구려, 남방의 왜가 상호 대립하는 양대 축이었고, 백제, 신라, 가야는 그 사이에 부용한 세력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임나일본부설과 연결되는 것으로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를 만주세력의 南進과 일본세력의 北進 속에 부수적으로 존재했던 역사로 평가절하하는 측면이 있었다.

‘만선사관’에서는 고구려의 멸망을 만선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았다. 고구려 멸망 후 대동강 유역이 당나라의 안동도호부에 속하게 됨으로써, ‘滿鮮은 종래 一家였다’고 하는 사고가 파탄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발달을 보장해주었던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함으로써 滿鮮의 형세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멸망과정과 고구려 遺民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런 한편 문화적인 면에서 중국 문화와 다른 면을 부각시키며 고구려 문화의 독창적인 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구려문화 가운데 주된 연구대상은 벽화고분이었다. 여기에서는 중국문화적 요소보다는 멀리 서역지방과 관련이 있는 요소나 고구려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요소 등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적으로도 중국과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1910대 들어가면서 평양과 만주지역에 있는 고구려 고적조사가 일제 지원하에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만선사학에서도 환도성과 국내성, 구련성 등 고구려 역사상 중요한 성들의 위치에 대한 연구를 했다. 고구려의 5部 5族 문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5부5족은 고구려의 국가적 성격과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관련 연구가 시도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다른 주제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40년대까지는 초보적인 연구만 진행되어 실제적인 성격을 제대로 분석해내지는 못했다.

사실 만선사학을 주도한 연구자 가운데 고구려사 연구에만 집중한 연구자는 거의

없었다. 1910년대와 20년대 초반에 津田左右吉,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이후 池内宏이 관련 논문을 집중적으로 내놓았을 뿐 그 외에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학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전문적인 연구논문보다 개설서류에 고구려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결국 '만선사관'에서의 고구려인식이 고구려 관련 사료 자체에 대한 검토 끝에 도출된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관찰과 선입견 아래 내려진 판단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동북공정'에서의 고구려사 연구

'동북공정'은 동북 3성 지역의 古代史부터 未來事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했는데,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부여사 등 한국고대사와 관련된 분야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歸屬시키기 위한 논리를 마련하는데 특히 집중했다.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는 중국 고대의 지방정권이자, 중국 고대 少數民族政權이었으므로, 고구려사는 한국사가 아닌 중국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학계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점적으로 연구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가 중국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귀속문제 자체를 다룬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둘째, 고구려의 族屬起源이 신라 등의 韓系와는 전혀 관계없는 중국계라고 강조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고구려 민족의 기원에 대해 중국 북방에서 활동하던 고대의 貊族, 顯瑣高陽氏의 후손인 高夷族, 殷商族, 山東지역의 炎帝族說 등이 나왔다. 中源에서 起源한 민족이 이동해서 고구려를 건국했으므로 그 역사는 중국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의 모순점에 대한 비판이 일자, 고구려는 濊貊族, 高夷族, 炎帝族, 漢族, 沃沮, 東濊, 挹婁, 韓族이 결합된 多民族國家이었고, 이들 모두 중국 고대 민족이므로 고구려사는 중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고구려가 중국과 朝貢-册封 관계에 있었으므로 독립국가가 아니었다고 한다. 중국의 조공-책봉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남북조 시기에 고구려는 남조와 북조에 동시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다. 만약 독립국이 아닌 지방정권이었다면 고구려로서는

북조와 남조에 동시에 소속된 지방이었던 것이 된다.

넷째,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사의 귀속 문제에 대한 논문들이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중국 땅에 속하는 모든 지역, 그 땅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사는 모두 중국사라고 보는 이른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따르면 현재 북한 땅에 속하는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이른바 ‘一史兩用說’이 나왔다. 평양천도 이전까지의 고구려사는 중국사, 이후부터는 한국사로 보는 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02년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부터는 역사적 영역설을 내세워 고구려사 전체를 중국사로 보고 있다. 평양은 낙랑군, 집안은 현도군 고구려현이 있던 곳이므로 시종 중국의 역사적 영역 안에 있었으므로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것이다.

다섯째,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끌려가 漢族으로 흡수되었고, 신라로 내려가 오늘날의 한민족으로 된 사람들 수는 그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중국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 아래 고구려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에 대해서도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지방정권의 이탈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군사활동이자 만주내부의 통일전쟁이라고 보는 연구가 나왔다. 또 왕건의 고려와 고구려는 이름만 같을 뿐 서로 계승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따라 『宋史』 이후 중국 정사에서 왕건의 고려를 고구려 계승국으로 서술한 것을 명백히 잘못된 역사서술이라고 비판하는 글들도 나왔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동북공정’에서는 귀속문제를 밝히는데 필요한 주제들 위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역사의 계승, 정통성의 계승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전왕조의 역사를 후왕조가 정사로 펴낸 것이다. 고려왕조에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펴낸 것과 달리 중국정사에서는 고구려를 자기 선조로 본 역사책을 낸 적이 없다. 정해놓은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동북공정’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3)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은 1세기에 가까운 시간차이가 있고 전자는 일본사학계, 후자는 중국사학계에서 주창했다는 점에서 상호 거리가 있는 듯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자 모두 만주와 한반도 북부지역을 공간적 대상으로 한 역사연구이며 현재 영토 중심주의 역사관이라는 점이 일치한다. 이처럼 일정한 지역을 인위적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출발부터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된다.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조선, 고구려, 부여, 그리고 만주지역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비중은 고대사에 두어지고, 만주와 한반도 중부 이북지역 주민과 그 이남지역 주민들을 분리해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종족 문제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고구려, 부여, 백제 등의 濊貊系와 삼한 및 신라 등의 韓系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인적, 공간적 분리는 곧 역사의 분리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고대사에 해당하는 고조선, 고구려, 부여의 경우 한국학계 뿐 아니라 일본학계와 중국학계에서도 조선사, 한국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왔었다. 그런 인식을 부정하고 고조선, 고구려, 부여사와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해석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三國志』 魏志에 이들 모두가 東夷傳에 편제된 것같은 정해진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사료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은 一例일 뿐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사료의 자의적인 취사선택이 이루어졌다.

'만선사학'과 '동북공정'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등 한국측 사서에 나오는 사료를 부정하고, 중국사서 및 일본 사서의 사료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인다. 과학적·객관적인 분석과 중국·일본 사료와의 비교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측 사료를 일방적으로 불신해버리고, 외부인이 작성한 사료만 선택한 것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예컨대 신라 말 후삼국의 성립 및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고려의 건국, 『삼국사기』에 고구려본기가 설정된 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史的 분리, 민족상의 분리를 논한 것은 결론에 맞춘 사료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은 모두 현재적 관점이 우선시되고, 정치현실적 목적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양자는 모두 학술적 연구임을 전면에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만선사 연구는 일제의 만주진출과 조선지배의 안정이 주요한 목적이자 배경이었다. 또 ‘동북공정’은 동북3성 지역과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중국내 조선족의 동요를 막고 북한의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역사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현실적 목적 아래 실시되었다. 따라서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내지는 지배권리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에서 가장 우선을 둔 역사가 고구려사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고구려사 가운데서도 종족(중국학계에서는 민족)문제, 중국과의 전쟁, 문화적 측면에서의 중국과의 관련성 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도 일치성을 보인다.

그런데 해당 주제에 대한 검토결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났다. 고구려의 종족(민족)에 대해 ‘만선사관’에서 중원 종족과 별개의 예맥족으로 본 것과 달리 ‘동북공정’에서는 중원인의 이주라고 보거나 토착족이라 하더라도 모두 중국 고대의 소수민족에 속했다고 한다. 중국과의 전쟁에 대해 ‘만선사관’에서 隋·唐 침략의 격퇴라는 점에서 고구려의 우수성을 강조했으나, ‘동북공정’에서는 이를 외국과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지방정권의 반란, 혹은 통일전쟁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 문화의 성격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만선사관’에서는 중원문화 외에 서역 등의 외부문화의 영향도 받았으나, 그것을 고구려의 독창적인 문화로 재창조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 문화 가운데 중원문화의 영향이 보이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은 외부자적인 입장과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고구려의 성립, 발전, 구조, 고구려인들의 문화와 생활 등 고구려사 자체보다 외부와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고구려사의 객관적인 복원보다는 현재의 필요성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에서의 고구려인식에는 공통점이 꽤 많다.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릴 때에도 실상 그 뿌리는 같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구려사를 조선사에서 떼어내 중국사로 본 것은 1932년에 나온 傅斯年의 『東北史綱』 과

1941년에 나온 金毓黻의 『東北通史』 부터였다. 특히 『東北通史』 는 오늘날 동북지 역사 연구자들의 역사인식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런데 金毓黻 등이 고구려사를 중국 사라고 한 것은 ‘만선사관’에서 고구려사를 포함한 만주지역 역사를 중국사와 분리시키는데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동북공정’의 성립에는 ‘만선사관’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학문적인 완성도에 관계없이 일단 학계에 제시된 연구물이나 역사관은 수용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오랫동안 후학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이 역사 학자들의 영역을 떠나 각국 국민들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갈 경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진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현재의 필요성과 시각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경우 역사왜곡으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에서의 선언적인 주장들을 주목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맺음말

이제 주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역사갈등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할까 한다.

고구려사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한 주변국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고민할 때 우리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역사에도 흑백논리적 시각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날 어느 한 나라에만 완전히 속한다고 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옛날과 지금의 국경선이 완전히 일치하고, 민족의 소속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의 소속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영토와 주민의 계승을 중요한 조건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이다. 어떤 나라가 이전에 있던 왕조의 영토와 주민을 모두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후계자이고 그 역사의 계승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역사계승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여가 있었던 곳은 지금은 우리

영토가 아니다.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가 모두 부여로부터 기원했다는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여 역시 우리 역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고조선·고구려·발해에 대해 영토도 이어받았고 역사계승 의식도 가지고 있다. 특히 역사계승의식은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부여에 대한 역사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책을 서술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기』 이래 줄곧 이들 나라를 다른 나라로 취급했다. 그들이 편찬한 정사의 본기부분이 아닌 외국 열전 부분에 이 나라의 역사를 배치해놓은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뿐만 아니라 『송사』에는 고려왕조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그 선대가 고구려였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 이후 나온 역사책도 모두 이에 따랐다. 그런데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중국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 갑자기 고조선사와 고구려사가 한국사가 아니고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근거를 대더라도 중국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부여의 역사가 한국사에 속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 이 역사들이 중국사에 속할 여지는 조금도 없을까? 역사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 자기가 속한 집단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에게도 지금 중국 땅이 된 동북 3성 지역이 옛날에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그 역사를 서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고조선사, 고구려사, 부여사, 발해사는 한민족의 기원, 한민족의 성립, 한국문화의 성립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국사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사를 빼면 한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흐려지게 되고, 한국사 자체를 새로 써야한다. 그러므로 이 역사들은 한국사에서 뺄 수가 없다. 그런 한편 중국에서도 현재 자기나라 영토인 동북 3성 지역의 과거사를 서술해야만 한다. 즉 한국사에서는 本流史, 中心史로서 만주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역사에 대해 당연히 서술해야 하고, 중국에서도 地域史, 郷土史로서 그 지역의 과거사를 서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고구려사나 그것이 전개되었던 지역이 모두 중국의 것이라며, 현재적 목적 아래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韓·中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한편, 우리들도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정서상으로는 中央史, 中心史로서의 韓國史와 鄉土史, 地域史로서의 중국사라는 인식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지나친 민족주의적 정서에 바탕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역사인식은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는 자칫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잘못을 성토했다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으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고립될 우려도 있다.

그러면 고구려사 귀속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목적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원칙은 현재의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재의 국경선은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국제법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다. 역사적인 면에서 현실의 상황을 전면 부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끝이 없는 논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일단은 현실의 국경선을 인정한 상태에서 역사를 서술하되, 잘못된 과정에 의해 성립된 국경선 문제는 다른 절차를 밟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 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또 역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미래를 건설하는데 있다. 국가발전만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 더 나아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적인 면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해야 한다. 고구려나 발해의 경우, 그 영토와 주민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북한, 한국, 중국)들이 함께 그 역사와 문화를 규명해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상호 화해와 협력의 장을 넓혀나갈 수 있고, 그래야만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복원할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그 인적, 문화적 유산은 남북한과 중국 뿐 아니라 몽골, 터키, 일본

에서도 부분적으로 나뉘어졌다. 이것은 ‘고구려’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이들 나라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구려의 정신과 문화를 가장 정통으로 계승한 우리들이므로 고구려인의 후손들답게 열린 사고, 객관적인 사고로 우리 역사와 주변국과의 관계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몰랐던 발해사

윤재운 (대구대 교수)

우리가 몰랐던 발해사

윤재운 (대구대 교수)

1. 발해 문화를 통해 본 고구려 계승성

1) 발해의 주민

발해의 주민의 대다수는 고구려인이었다.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 호구수는 69만 7,000호였는데, 호당 평균 5명씩으로 계산하면 인구는 대략 350만명이 된다. 이 가운데 3만 8,300호(대략 20만명)는 당나라로 끌려갔다고 보고 돌궐과 말갈로 간 사람들, 신라일본 등지로 간 사람들을 포함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원래 살던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발해건국을 전후한 사실을 전한 기록들에는 대조영의 휘하에 있던 고구려인, 말갈인만도 '40만명' 또는 '40여만호'였다고 한다. 그리고 발해의 건국소식을 듣고 고구려인들이 점차 발해로 모여들었다고 하니 고구려유민의 수가 더욱 늘어났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비하면 말갈인의 수는 매우 적었다. 『수서(隋書)』에 의하면, 말갈족은 크게 '7부'가 있다고 한다. 이 중 고구려의 동북쪽에 인접한 속말말갈의 군사는 수천이며, 백산말갈과 백돌말갈은 각각 3천과 7천 정도였다고 한다. 군사숫자를 통해 말갈 7부의 인구를 대략 계산한다면 15만~20만명 정도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발해 전체 인구에서 말갈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미만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2) 발해문화의 고구려적 요소

발해문화 가운데 고구려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墓制에 대해 말하자면, 발해의 고분은 크게 石室墓, 磚室墓, 土壙墓(중국의 土坑墓, 土坑豎穴墓)을 들 수 있다. 석실묘는 주로 고구려인들이 축조했던 고분들로서, 이것들은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吉林, 延邊 등 중국 동부의 早期 석관묘의 전통과 集安 고구려의 적석묘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한다. 한편 磚室墓는 당나라의 전통이 많은 묘제로 알려져 있으며, 土壙墓는 이른바 말갈의 전통이 깊은 묘제로 알려져 있다.

중국학계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지배층의 石室墳 文化를 漢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제 하면서, 이것 역시 말갈의 土坑墓 전통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발해를 말갈계로 보려는 시각에서 나온 억측이 아닌가 한다. 豎穴式 土壙墓 文化는 전근대 피지배층인들이 사용하던 인류 보편의 문화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한다. 또한 벽돌을 고분에 많이 이용한 것도 멀리서 漢系의 문화가 많이 전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벽돌을 사용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漢風 내지 唐風이라고만 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자연환경적으로 돌보다 흙이 많은 곳에서는 벽돌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정효공주무덤 같이 벽돌로 축조한 발해고분이라 하더라도, 천장 마감 방법 등을 비롯한 고분 축조방식은 여전히 고구려 양식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무덤위의 건축에 대해 살펴보겠다. 삼릉둔 1호묘와 하남둔고분에서는 봉토 위에서 주춧돌이 발견되었고, 육정산고분군과 용두산고분군에서는 봉토에서 기와들이 다수 노출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불교가 성행하면서 탑으로 대체되었는데, 정효공주무덤과 마적달무덤은 승려의 무덤이 아닌 데도 그 위에 벽돌로 만든 탑이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중국학자들이 말갈의 풍속을 계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고구려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고분에서 기와가 다수 발견되었고, 將軍塚 정상부에 있는 건물 난간의 흔적 같은 것들이 이를 증명해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주거문화이다. 중국학계에서 말갈유지로 보는 黑龍江省 東寧縣 團結遺址에서 발견된 네 개의 발해집터도 유명하다. 이곳에서도 온돌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중국학계에서는 고구려와의 관계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수많은 고구려 유적과 발해 상경용천부터, 함경남도 오매리 발해유적, 러시아 연해주의 노보고르데예프카, 스타로렌첸카, 코르사코프카 유적들에서도 온돌이 확인된 바 있다.

넷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성터이다. 고구려 산성의 특징으로는 雉, 甕城, 축성법 등을 들 수 있다. 치란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일찍 관측하고, 전투를 할 때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정면과 양쪽 측면, 3면에서 공격하여 격퇴할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튀어나오게 한 시설이다. 웅성은 적군의 공격에 직접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문 바깥에 성벽을 하나 더 붙여 쌓아 면적이 크지 않게 만든 방어용 성벽을 말한다. 고구려 산성의 축성법은 성벽건축에 돌을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점들은 발해의 城에도 그대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3) 발해문화의 말갈적 요소

발해사에 있어서의 토광묘는 『구당서』에 “죽은 자는 땅을 파고 묻는데, 시체를 그대로 흙에 묻으므로 관이나 얹히는 도구가 없다”는 기록 등에 입각하여 말갈의 전형적인 묘제로 보인다. 이러한 토광묘는 기록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육정산 제2고분군에서 2기가, 그리고 吉林 永吉의 楊屯 大海猛에서 90기가 발견되었는가 하면, 吉林 榆樹의 老河深에서도 30기가 발견되었고, 吉林 永吉의 查理巴유적에서 42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말갈의 묘제가 주로 분포하는 곳은 흑수말갈인이 거주하는 흑룡강 연안과 속말갈인이 거주하는 송화강유역 및 솔빈부 소재지인 러시아 연해주 일대라고 한다.

4) 발해문화의 당문화 요소

우선 博室墓, 즉 벽돌무덤은 당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발해 중기 이후에 왕실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다. 이러한 것으로는 정효공주무덤과 마적달무덤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효공주무덤의 벽은 벽돌로 쌓았으면서 천정은 돌로 평행고임을 하여 당나라 양식과 고구려 양식이 결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 밖에 상경 부근의 삼릉둔 1호묘는 돌을 벽돌처럼 깎아서 축조하였다.

다음으로는 발해 도성을 들 수 있다. 발해의 도성에는 성산자산성과 영승유적·상경성(동경성)·서고성·팔련성이 있다. 도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경성이다. 상경성은 黑龍江省 寧安縣 동경성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은 당나라 장안성을 본떠서 外城·宮城·皇城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해성은 성산자산성과 영승유적처럼 초기에는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된 방어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집안의 환도산성과 국내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다가 문왕이 8세기 중반에 상경으로 천도하고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장안성을 모방하여 평지성 중심의 방어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상경성이나 서고성과 팔련성은 이러한 계통에 속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보면 발해의 성은 건국기에 고구려식을 계승하다가 문왕 시기쯤부터 당나라식으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발해문화의 기타 요소

발해문화에서 고구려, 말갈, 당문화의 요소외에 다른 요소를 살펴보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샤프꾸노프의 견해가 참고 된다. 그도 물론 “발해는 중국 사료에 勿吉 또는 靺鞨이라 적혀 있는 퉁구스語 종족인 무크리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룩한 국가이다”고 정의를 내리면서도, 발해 영토에는 고구려인, 위구르인, 실위인, 소그드인 등 다양한 종족이 살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다른 글에서 발해 문화에 고구려 및 중국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건국자인 말갈족이 오래전부터 접촉해왔고 건국 뒤에는 그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 요소를 차용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발해는 말갈족

을 기본으로 하는 다민족국가로서, 남부에는 고구려인이 우세하였고, 남서·서·북서부에 말갈족과 함께 몽골語 종족인 거란과 실위 및 돌궐어 종족인 위구르족이 거주하였고, 북동부에는 니브히語 종족이 거주하였고, 동부에는 아이누어 종족인 굴설 또는 고이가 거주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밖에 발해 곳곳에 소규모의 이란語 종족인 소그드인(오늘날 타지크인의 조상)의 거류지가 있었으니, 이들 덕택에 발해 문화에 소그드, 호탄, 이란 문화에 특징적인 요소들도 자리를 잡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한·중·일에서 강조하는 당나라 요소나 고구려 요소를 희석시키면서 만주연해주의 소수민족과 중앙아시아 민족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발해에는 불교 이외에도 景教(네스토리우스교)와 샤머니즘의 흔적도 보인다. 팔련성 제2절터에서 발견된 三尊佛에는 십자가 같은 것을 매단 목걸이가 보이고, 러시아 연해주 의 아브리코스절터에서도 경교 십자가가 새겨진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발해에 경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발해문화의 여러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발해의 문화에는 고구려문화를 계승한 것도 있고, 당이나 말갈족의 문화 등의 여러 문화의 요소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해문화의 담당층이나 중심적인 요소 즉 매장문화나 주거문화 등의 중심적인 요인이 고구려를 계승한 점이라는 것이다. 다른 요소는 부수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는 발해문화의 다양성이나 개방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해의 경제

1) 발해의 농업

(1) 토지제도

발해는 봉건국가였고 경제적 기초는 주로 토지에 대한 봉건소유였다. 봉건토지소유의 형식은 지주토지소유, 국가토지소유, 소농민 토지 소유, 공사토지소유 등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지주토지소유제가 주도적이었다.

발해는 토지 제도 면에서 당나라의 균전제(均田制)와 같은 것을 실시하지는 않았는가 짐작된다. 편호(編戶)들은 규정에 따라 조세와 부세를 바치고 병역과 요역에 나가야만 하였다. 『거란국지(契丹國志)』에 의하면 동단(東丹)정권은 매년 거란국에 세포(細布) 5만 필, 조포(粗布) 10만 필, 말 1,000필 등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실물부세제도(實物賦稅制度)이다. 동단국이 거란에 바친 실물부세로 보아 동단국의 주민들도 나라에 일정한 양의 식량, 마포 그리고 기타 노동산품을 부세로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발해의 토지제도는 국가적 또는 사적인 지주적 소유제였다. 특히 왕실이나 둔전과 같은 왕실 및 국가적 토지가 있었을 것임은 그 방대한 통치기구가 뒷받침하지만, 왕실과 국가재정의 분리가 불투명하였다. 발해는 국초 오랜 기간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사적 대지주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지주들은 전란 속에서도 자신의 소유지와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해 토지소유제의 또 다른 특징은 공동체적 소유(방목지)였다고 보기도 한다. 아울러 '10분의 1세제'가 실시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시에 발해는 결부제와 전시과를 시행하였으며, 결국 정전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사항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전법은 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조세수탈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2) 농업생산력

기후가 낮고 무상기가 짧은 북쪽지대에서는 내한성이 강하고 무상기가 짧고 성숙기가 빠른 보리, 밀, 메밀 등을 위주로 하여 재배하였고 그 외에도 조, 콩, 피, 수수 등의 농작물을 심었다. 한편 기후가 따뜻하고 땅이 비옥하며 수원이 충족하고 관개에 편리한 남부와 중부의 평원지대에서는 벼를 심었다. 그 외 또 조, 수수, 콩, 기장, 보리, 밀 등을 재배하였다.

발해농업생산의 발전은 아주 불균형적이었다. 후수 말갈인들이 거주하는 북부지대는 속말갈말갈인들, 고구려인들이 거주한 지대보다 낙후하였고 평원지대와의 차이도 매우 심하였다. 발해의 주요한 농업생산지는 기후가 따뜻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수원이 충족한 남부, 중부와 평원지대였다.

(3) 가축사육

말은 발해에서 사육된 가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사육되었고, 그 중에서도 솔빈부의 말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었다. 730년 발해는 당에 조공하면서 말 30필을 바쳤고, 그 후 오래지 않아 다시 말 30필을 바쳤다. 치청절도사 이정기는 산둥(山東)에 할거하면서 매년 발해와 말을 교역하여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발해 측에서도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당나라는 8세기 중엽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지방의 통제가 해이해졌고, 그 결과 각지에서 번진(藩鎮) 세력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고구려계 유민 출신인 이정기(李正己)·이납(李汭)·이사고(李師古)·이사도(李師道)로 이어지는 이씨 일가의 세력이다. 그들은 신라와 해상 교통이 편리한 산둥 반도 전역을 장악하여, 3대에 걸쳐 55년간(765~819)이나 치외 법권적인 번진 세력으로 당나라 안의 소왕국(小王國)으로 군림하였다. 『구당서』에 발해의 명마가 계속하여 이정기의 평로치청번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통해 볼 때, 발해와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시기의 말사육은 유물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거의 모든 발해유적 말뼈가 발견되었다. 노보고르제예브카 취락지에서 발견된 가축뼈 전체에서 말뼈가 6.5%를 차지한다. 노보고르제예브카 성터에서는 10.2%, 니콜라예브카II 성터의

아래층위에서는 13.7%, 위층에서는 15.6%, 마리아노브카 성터에서는 22.5%를 각각 차지한다. 이들 자료는 말고기가 식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년이나 늙은 말을 도살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생활과 전쟁에 말이 널리 이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발해에서 기른 집짐승으로서는 다음으로 돼지가 매우 유명하였다. 사료에는 ‘막힐의 돼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발해 때에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막힐의 돼지가 가장 이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개도 발해의 가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동물의 하나였다. 개 사육은 사냥이 발전하고 있었던 발해 사람들의 경제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발해 사람들은 개와 매를 사냥에 널리 이용하였으므로 개 사육이 매우 일반화되고 있었다. 발해 때에는 개가 수송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특수한 유형의 역참인 구참(狗站)에서는 개를 이용하는 썰매가 많이 이용되었다. 이것은 개가 집짐승으로 많이 길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 발해의 수공업

(1) 직조수공업

『신당서』 발해전에는 각지의 대표적인 생산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태백산의 토끼, 남해의 곤포(昆布; 다시마), 책성의 메주, 부여의 시슴, 막힐의 돼지, 솔빈의 말, 현주의 마포(布), 옥저의 풀숨(黼), 용주의 명주(紬), 위성의 철(鐵), 노성의 벼(稻), 미타호의 붕어” 등이다. 이 중 일부는 발해에서 직조되거나 생산되었던 의료로서 발해의 복식이나 경제적 교류 품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현주는 유명한 마포 생산지였다. 이곳은 옛 옥저의 땅으로서 맥포(貂布)는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에도 옥저의 특산물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주에서 고급 세포(細布)가 발달한 것은 이곳이 일시 발해 지배계급이 거주했던 수도였던 시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해가 후당(後唐)에 조공품으로 보낸 세포, 또는 말갈족이 거란과 교역한 세백포(細白布)는 모두 이 현주의 포와 같은 것일 것이다. 현재 돈화 육

정산고분군, 화룡 북대고분군, 그리고 용두산고분군에서 발해시대의 마포가 발견되었는데, 이 천은 길쌈이 엄밀하고 고르며 아직도 광택이 나는 은백색을 띠고 있었다.

발해의 남부와 동부에서는 멧누에를 길러 고치로부터 실을 뽑아 솜(綿)을 만들어 각종 주(綢)와 주(紬)를 짰다. 그 중에서도 남경 남해부의 옥주(沃州)는 유명한 풀솜 생산지였다. 풀솜은 뽕나무에 나는 멧누에의 고치에서 실이 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명주 비단이 생산되는 모든 곳에서는 모두 이 풀솜이 생산되었지만 옥주의 풀솜이 가장 질이 좋았던 것 같다. 또한 상경 용천부의 용주(龍州)는 솜 실로 짠 주가 유명하였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에 예속(濊俗)에 면포(綿布)를 만든다고 한 면포는 바로 주(紬)이다. 종래 발해 때에 흑수말같이 당에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를 바쳤다는 기록을 근거로 발해 북부에서 주가 생산되었을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이것은 신라의 명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용주에서 주가 생산된 것은 이곳에 모인 발해의 지배계급의 강한 수요에 연유한 것이지만, 주원료인 면(綿)이 옥주에서의 생산량으로는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도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원료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함에 따라 품종이나 수량에 큰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해가 생산하는 사직품(絲織品)은 수량이나 채색 종류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관청에서 만들어져 왕실 귀족에게 제공되었다. 즉 발해가 옥주의 면을 원료로 하는 관영 직조공장을 두고 있었던 것은 발해 멸망 후 요나라에서 발해인이 공정에 직물을 공급하는 능직원(綾錦院)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2) 금속수공업

발해인들은 철을 제련하는데 능숙하였다. 돈화·화룡·영안·동녕 등의 발해유적지와 무덤에서 많은 수량의 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생철(生鐵)로 주조한 것이 있는가 하면, 숙철(熟鐵)로 단조한 것도 있다. 중경 현덕부 철주(鐵州) 관할의 위성(位城)이 유명한 철 생산지였고, 이밖에 『요사』 식화지에는 철리부의 광주(廣州)에서도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요는 발해를 멸망시킨 뒤 발해의 야철 장인들을 거란 영토내로 대거 이주시켰다.

중국경내 발해유적은 지금까지 약 400곳 정도가 보고되었고, 이 가운데 제철유적이 5개소·단야유적이 2개소·주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적이 2개소 확인되었다. 광산 주변에 삼림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연료가 풍부한 장소까지 원료를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철광석과 연료가 토성이나 도성에 운반되어 그곳에서 제련이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토성이나 도성 부근에서 제철이 행해진 배경에는, 철광석과 연료가 교역물 자로서 주변각지에서 모여 제철유적에서 생산된 철 소재는 성내로 운반되고 단야나 주물 공방에서 제철품이 제작되었다. 혜장유적·신안고성·온특혁부성·상경 3호문 북쪽 건축유구 등은, 이런 공정에 관계된 유적이다. 이처럼 토성이나 도성은, 자원을 가공하여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도시적인 환경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3) 제동업

구리는 생활용구와 각종의 장식품을 만드는데 비교적 널리 사용되었다. 영안 상경 유적지, 돈화 육정산, 동녕 대성자, 집안 등지에서는 대량의 구리제품이 출토되었다. 특히 말탄 사람 모형은 높이가 5.2cm에 지나지 않지만 말과 장식 및 사람 등을 섬세한 수법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발해인의 높은 주조기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814년 발해 사신 고예진(高禮進)이 당에 금불상과 은불상 각 1개씩을 가져간 것이나 836년 발해가 숙동(熟銅)을 등주(登州)까지 운반하여 당(唐)과 무역한 사실을 통하여 발해의 구리 생산과 구리 제련기술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숙동은 잘 정제한 정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제 1차 동제련로에서 생산된 조동(粗銅)을 정련로에서 다시 한 번 잘 정제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것이다.

(4) 조선업

발해배의 크기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배에 탄 인원을 가지고 대략적인 규모를 추측해 볼 수 있다. 8세기에 일본에 건너간 발해 사신들의 배에 탄 인원수를 보면 727년에 배 한 척에 24명, 739년에는 배 두 척에 80명, 752년에는 배 두 척에 75명, 773년에는 배 한 척에 40명이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

다. 이렇게 놓고 보면 배 한 척당 727년에는 24명, 739년에는 40명, 752년에는 37~38명, 773년에는 40명이 탄 것으로 된다.

그러나 9세기에 들어와서 배 한 척당 승선 인원수가 8세기에 비하여 훨씬 많아진다. 823년에는 배 한 척에 101명, 826년에는 배 한 척에 103명, 828년과 849년에는 각각 배 한 척에 100명, 859년에는 배 한 척에 104명 그리고 842년과 861년·872년·877년·882년·895년·919년에는 각각 배 한 척에 105명의 인원이 타고 갔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9세기 이후의 발해 사신들이 이용한 배는 8세기의 배에 비하여 그 크기가 2~3배 또는 4배 이상이 되었다. 따라서 발해에서 일본에 내왕한 배들 가운데서 8세기의 것은 선체와 적재중량을 포함하여 대체로 70~80톤급 정도의 것으로 짐작되며 9세기의 것은 300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상운수에 사용된 배를 만든 조선소는 주로 동경용원부 관할하의 염주(鹽州)의 소재지인 모구위(毛口巖: 오늘의 크라스키노성)일대, 남경 남해부 관할하의 토호포(吐呼浦)일대, 서경 압록부 관할하의 신주(神州)와 압록강하구일대 등에 있었을 것이다.

한편 발해시기 내륙수상운수는 조세, 각지의 특산물, 무역품, 농산물, 군사물자 등 여러 가지 물자수송에 널리 이용되었고 군사인원수송을 비롯한 군사적 목적에도 이용되었다. 발해시기 내륙수상운수에는 중형의 배와 작은 배들이 널리 이용되었다. 작은 배는 큰 배에 비하여 어디서나 비교적 쉽게 운행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하천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그 이용범위가 보다 넓고 사회적으로 수요도 많았다.

3) 발해의 수산업과 수렵

발해 사람들은 바다와 강하천, 호수들에서 여러 가지 물고기와 해산물을 생산하여 그것을 식용으로 널리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수출하였다. 또한 넓은 산림지대가 펼쳐져 있었으므로 짐승사냥도 매우 발전하고 있었다. 발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산짐승을 잡아 고기와 함께 가죽, 털을 널리 이용하였다.

『책부원귀』를 비롯한 역사기록들에는 발해의 수출품명들이 나온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모피들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범가죽, 곰가죽, 삿가죽, 돼지가죽, 표범가죽들이 그러한 실례가 된다. 이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검은 담비가죽 즉 흑초(黑貂)이다.

최근 소그드(Sogd)인의 활약을 지적한 연구 성과에 따르면 발해는 동방뿐만 아니라 서방 사회와도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샤부크노프(E. Shavkunov)는 8~10세기에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인 또는 보하라인이 교역을 하고, 발해의 솔빈부(率賓府: 현재의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市 일대)가 있던 땅에 이민들이 콜로니(colony) 곧 집락(集落)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그드인은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제라프산강 유역의 소그디아나에 거주하던 이란계 종족으로 일찍부터 동서 교역에 종사하여 상술에 뛰어났으며, 소그드인의 동방 교역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경내에 이르는 여러 곳에 식민 거점을 건설하여 교역에 활용한 점이다. 샤부크노프는 연해 지방이나 남시베리아 등에서 발견되는 중앙아시아제의 은화·거울·장식품, 혹은 중국 동북에 있었던 집락이나 민족의 이름 등을 통하여, 발해의 명품 가운데 하나였던 검은담비 가죽이 소그드인을 통해 서역(중앙아시아)에 까지 수출되었다고 하였다.

모피는 서역 즉 오늘의 중앙아시아일대까지 수출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으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다. 최초로 일본을 방문한 발해 사신 고제덕이 전한 물품에는 담비 가죽 300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발해 사신이 일본을 방문하여 교류한 물품에는 반드시 모피가 포함되었고, 교류 물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종류도 담비 가죽, 곰가죽, 호랑이가죽 등으로 다양했다. 이렇게 전달된 모피가 점차 일본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귀족들의 모피 욕구를 부추켰던 것 같다.

『연희식(延喜式)』에 보면 ‘담비 가죽은 참의(參議) 이상만 착용하도록 한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헤이안(平安) 시대의 참의는 정4위하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고위 관직에 속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담비 가죽을 일본 사회의 최고위층에 한해 착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생각을 확대해 보면 이러한 제한 규정이 명시되었다는 것은 당시 많은 귀족들이 모피를 즐겨 착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 차원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모피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귀족들의 사치욕은 계속되었던 것 같다. 모피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920년 발해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풍락원에서 열렸다. 때는 장마철이라 후덥지근한 날씨였다. 당시 파견되었던 발해 사신은 배구(裴謬)였는데, 그는 모피 수출국 사신이라는 체면에 걸맞게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연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배구는 중명(重明)친왕의 차림새를 보고 그만 손을 들고 말했다. 당시 연회에 참석했던 중명친왕은 가장 고가품에 해당하는 검은담비 가죽옷을 8벌이나 겹쳐 입고 참석했기 때문이다. 모피구매와 착용을 과시하는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당시 모피가 얼마나 유행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4) 발해의 무역

(1) 무역의 형태

발해는 당(唐)에만 120여 회, 일본에는 34회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남북국시대뿐만 아니라 한국 전근대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중국무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남북국시대의 대당무역은 그 주체에 따라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공무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조공(朝貢)과 책봉(册封)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자교역과, 호시(互市)를 통한 교역활동이 그것이다.

외국사절로부터 당에 건너온 물품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황제수번사표급폐(皇帝受蕃使表及幣)’에 ‘폐(幣)’와 ‘정실(庭實)’이라고 기록되었듯이 두 종류의 현상품이 존재하였다. 또한 당으로부터의 답례품도 연회장에서 주는 물품과는 별도로 사절의 귀국 환송장에서도 사물(賜物)의 수여가 있어서, 이것도 외국으로부터 두 종류의 현상품에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왕조측의 조공무역관리는 조공관계를 맺은 국명(國名)은 예부(禮部) 주객낭중(主客郎中)과 홍려시(鴻臚寺)·전객서(典客署)에서 기록하였고, 무역품목·액수는 호부(戶部)가 기록하였다. 또 물품의 보관은 태부시(太府寺)가 관리하였다.

위에서처럼 조공과 하사의 형식을 통해 상당량의 물자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조공과 관작(官爵), 인수(印綬)의 수여를 통한 중국 정부와 발해 사이의 물자교류형태를 조공무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당무역(對唐貿易)에서 조공무역과 구별되는 것으로 호시(互市)를 통한 교역을 들 수 있다. 호시의 설치와 운영은 중국 황제의 허가에 의해 소재지 정부나 관인의 관리와 감독아래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호시에서 교환하는 것은 말이나 소·낙타 등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이정기(李正己) 일가가 지배하던 시기의 치청변진(淄靑藩鎮)과 발해사이의 교역을 들 수 있다. 이 때 당측(唐側)이 주는 것은 발해 지배층이 필요한 견(絹)·백(帛) 등의 직물이어서, 소위 ‘견마무역(絹馬貿易)’이라고도 불렀다.

발해와 당·일본과의 관계에는 조공관계이외의 것이 있었다. 교역의 형태면에서 조공무역이 공무역의 범주에 든다면 상인들의 활동에 의한 교역은 사무역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공사절단으로 간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 한 무역이나 해상세력에 의한 것도 사무역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외교사절단을 통한 부대적 무역의 사례는,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권21, 정관(貞觀) 14년 5월 20일~22일조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의 교역시스템을 보면 먼저 외국상인이 현지에 도착하면 교역을 담당하는 관리가 외국상인이 도착한 곳에 파견되어 가져온 물건들을 검사한 다음, 먼저 공무역을 행사한다. 그 뒤에 사무역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왕신가(王臣家)를 비롯한 귀족층은 공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가신을 파견하여 사절단과 사적무역을 행하고 있으며, 그것을 단속해야 할 지방관인 국사(國司)조차도 교역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반백성들(주로 지방의 유력 호족층)까지 교역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발해의 경우에는 공사(公使)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상인으로서 대일무역에 종사하였다. 신라인이 북구주(北九州)라는 일찍부터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교역의 무대로 한데에 비하여, 발해의 경우는 평안경(平安京)에서의 무역활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보다

공적인 신분으로 입경(入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이연효(李延孝), 이영각(李英覺), 이광현(李光玄) 같은 민간상인들도 일본과 사무역을 하였다.

(2) 무역의 구조

발해의 대외무역품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발해의 일본과 당에 대한 수출품이 다른 이유는 첫째로, 일본에 34회, 당에 100회 이상 파견된 사절과 견회수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즉 사절과견단의 횟수의 차이에 따라 남아 있는 사료의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보다 중요한 원인은 책봉체제하에 있던 발해와 당의 교섭과 당의 주변국가인 일본과의 대등한 교섭이라는 국가관계의 차이 때문이었다. 당에서 발해에 증여한 물품 중에 섬유제품이외는 서위(敍位)에 수반하는 금은대(金銀帶)·어대(魚帶)나 금은기(金銀器) 등이 두 나라 관계를 상징한다. 일본에서는 견제품(絹製品)이 증여되었지만, 때때로 요구에 응하여 금속가공에 필요한 황금이나 수은·남방산 빈랑선(檳榔扇) 등이 사절에 증여되었다.

셋째로 발해가 일본과 당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다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의 남부와 동부에서는 멧누에를 길러 고치로부터 실을 뽑아 솜을 만들어 각종 주(綢)와 주(紬)를 짰다. 주원료인 면이 옥주에서의 생산량으로는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도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원료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함에 따라 품종이나 수량에 큰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해가 당 보다 일본에서 많은 원재료를 수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발해는 섬유제품의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일부는 국내수요로, 일부는 대외수출품으로 가공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발해의 무역품의 생산체계는 어떠한이었을까. 『신당서』에는 발해 국내에 있는 5부(府) 3주(州) 2현(縣) 2읍(邑)과 두 지역의 산물을 기술하고 있다.

태백산의 토끼(太白山之菟), 남해의 곤포(南海之昆布) 책성의 된장(柵城之豉)

... 농산가공품(부단위)

부여의 사슴(夫餘之鹿), 막힐의 돼지(鄭頡之豬), 솔빈의 말(率濱之馬)

… 수렵, 목축산품(부단위)

현주의 포(顯州之布), 옥주의 면(沃州之綿), 용주의 주(龍州之紬) … 섬유제품(주단위)

위성의 철(位城之鐵) … 철광업제품(현단위)

노성의 벼(盧城之稻), 미타호의 붕어(湄沱湖之鮪) … 농어업산품(현단위)

환도의 오얏(丸都之李), 낙유의 배(樂游之梨) … 과일(읍단위)

이상에서 사료에 나온 발해의 수출품을 통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된다. 발해의 지방행정구역의 책임자는 수령(首領)이었다. 발해의 수령은 수렵·목축·어로 중심을 하는 주민의 생산 활동이나 집단질서를 통솔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상적인 물류·교역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해외무역활동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발해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 수령층을 외교·무역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 지배자로서의 사회적 신분과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재편하였다. 발해의 국가구조는 이 영역에 특유한 지리·자연조건과 밀접한 수렵·어로·목축이라고 하는 생산형태로 규정되어 각자의 수령을 매개로 한 지역지배 혹은 수령의 지방 관리화를 국가형태의 기본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문헌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당서』에 보이는 발해의 산물은 당발(唐渤)교역에서 당이 인식한 것으로, 발일(渤海)간의 교역품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신당서』에 보이는 발해산물은 농산가공품과 수렵·목축산품이 부(府)영역, 섬유제품이 주(州)영역, 광공업제품과 농어업산품이 현(縣)영역, 과일이 도읍영역과 행정단위별로 인식되었다. 셋째, 『신당서』에 기록된 발해 산물은 주로 발해남부 부(府)·주(州)에서 생산되었다. 넷째, 주명(州名)에 철(鐵)·염(鹽)·동(銅)의 생산을 엿볼 수 있는 이름이 있다. 다섯째, 문헌자료에는 발해가 동(銅)·철(鐵)을 생산한다는 것을 전한다. 여섯째, 동철(銅鐵)의 생산유적은 장백산(長白山) 기슭에 있고, 현재의 광산도 장백산 주변과 본계시(本溪市) 주변의 산간부이다. 일곱째, 토성이나 도성에 인접해서 제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원료와

연료가 교역물자와 함께 모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덟째, 금속·섬유 등의 생산이 연변주변에서 주로 행해졌다.

결국 발해의 생산구조는 제철유적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발해의 경제활동은 교역이 큰 기둥이고, 토성이나 도성은 지역물자를 모으는 장소였다. 철의 원료나 연료를 포함하는 발해각지의 산물도 교역품으로 모여, 토성이나 도성 주변에서 제철이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발해의 토성이나 도성은 물자를 교환하는 시장이었고, 또한 집약된 자원을 가공하는 생산거점이었다.

(3) 무역의 내용

발해와 당과의 무역은 713년 대조영이 아들을 당에 보내어 시장에서 교역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당 현종의 허락을 얻으면서 시작되었다. 발해가 중국으로 수출한 상품 은 담비·호랑이·표범·곰·말곰·토끼·쥐 등의 가죽, 인삼·우황·백부자(白附子)·사향·꿀 등의 약재, 고래·마른 문어·매·말·양·포(布)·주(綢)·주(紬)·구리 등이었다. 당에서 발해에 들여온 물품에는 백(帛)·금(錦)·면(綿)·견(絹)과 금·은으로 만든 그릇 등이 있었다. 특히 발해의 명마(名馬)는 등주(登州)와 청주(靑州)에서 많이 거래되었고, 836년에는 발해가 구리를 운반하여 등주에서 판 일도 있었다.

일본과의 경제교류는 주로 왕실간의 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민간무역도 일부 있었다. 양국 왕실간에 의례적인 예물교환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무역 이외에, 사신이 개인의 명의로 선물을 주고받는 형식의 무역, 사신단이 사관(使館)에서 일본측 관리들과 개인 상인을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사무역 등이 있었다. 양국간에는 발해의 상인들이 직접 일본에 가서 진행한 사무역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속일본기(續日本紀)』에는 천평(天平) 18년(746) 발해인과 철리국인(鐵利國人) 1,100명이 일본의 출우국(出羽國)에 상륙하여 교역활동을 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이 발해에 수출한 것에는 견(絹)·면(綿)·릉(綾)·금(錦)·포(布)·라(羅)·백라(白羅)·실·황금·수은·석유·수정염주(水精念珠), 빈선(檳扇)이 있었으며, 발해가 일본에 보낸 것에는 담비 가죽 호랑이 가죽표범 가죽·인삼·꿀 등의 토산물과 함께 당의 물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남쪽의 신라와도 견직물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제교류가 있었는데, 양국간의 교류로는 남경 남해부에서 신라의 동북경으로 들어가는 길이 주요 노선이었지만 민간 상인들이 많이 이용한 것은 서경 압록부의 환주(桓州)에서 만포를 거쳐 신라의 서북경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발해인이 서방으로 진출한 것도 보이고 있다. 파리 국립도서관소장의 페리오가 가져온 『잡재문초록(雜齋文抄錄)』에 ‘즉유차사강수발해고공(則有此寺剛首渤海高公)’이라 보인다. 이 사료는 토번(吐蕃)이 돈황을 점령한 9세기전반에, 모사(某寺)의 완성을 기념하여 열린 법회에 작성된 재문(齋文)으로 추측되고, ‘발해의 고공’은 발해인으로 돈황 사원의 최고실력자로서 활약하였다고 이해된다. 이 ‘발해고공(渤海高公)’을 발해인으로 보아도 좋다면, 발해인의 서방으로의 진출을 보이는 사료로써 귀중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발해인의 무역활동은 멸망후에도 계승되었다. 즉 발해인은 항해무역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발해시대에 활약범위가 일본·한국·중국의 산둥(山東)방면은 물론 멀리 강남연안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오대(五代)때에 중국연안제국(中國沿岸諸國)에 항해하여 온 거란상선은 실제로는 중주국인 거란 사신을 칭하여 온 발해인이었다. 아울러 발해 멸망 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제민족 즉 숙여진(熟女眞), 생여진(生女眞), 옥야국(屋惹國), 아리미국(阿里眉國), 파골려국(破骨廬國), 철리국(鐵離國) 등과 요(遼)·발해 유민이 세운 정안국(定安國) 사이에 대중국무역 주도권을 둘러싸고 암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발해가 8~10세기 동아시아의 무역에서 했던 가장 큰 역할은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완성 내지 완결을 이루었다는 점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전형적인 예가 당(唐) 월주(越州)에서 819년에 신라선으로 일본에 간 주광한(周光翰)의 자취이다. 박다(博多)에 도착한 주광한은 일본에서의 활동 뒤에 820년 이승영을 대사로 하는 발해사절단의 귀국선에 편승하여 발해로 건너갔다. 발해입국 후 주광한은 압록강을 따라 요동반도를 경유하여 발해만을 가로질러 산동반도에 도착하여 월주로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남부—일본(규슈)—동해—발해—요동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산동반도와 일본 규슈를 연결하는

발해 상인들과 동해를 건너 일본 동북지방과 교섭하던 발해사절단에 의해서도 연결되었다고 보인다.

발해가 8~10세기 동아시아의 무역에서 커다란 비중을 점하고 있었던 것은 항해 횟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발해의 존속기간인 698~926년까지 발해, 신라, 당, 일본간의 총 항해횟수는 기록상 356회이다. 이 수치에는 공적사절단인 외교사절의 왕래뿐만 아니라 상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왕래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발해와 당, 일본 등 해상을 통한 교류횟수는 총 151회에 달한다. 이는 전체 대비 42.4%에 해당하는 수치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왜 일본의 역사왜곡이 문제가 되는가?

최근의 한중일 관계를 신(新) 삼국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중국과 일본은 어떤 이웃일까요? 국민총생산(GDP)과 무역 통계를 보면 경제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상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요한 무역 상대국입니다. 에너지·환경분야에 대한 공동투자와 첨단기술 협력 등 3국 간 협력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민들 간의 교류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한일 양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비교해 보면 국가 간의 장벽은 높고 상호간의 신뢰에 기초한 협력이 뒤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에 필요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은 일본에 의해 자행되었던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역사인식을 전제로 하여 외교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나 각료의 발언을 통해, 때로는 담화를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을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정치가들이 이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의 잘못된 발언 한 마디, 행동 하나는 국민들이 교류를 통해 조금씩 쌓아 놓은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트립니다. 국민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간 협력도 어려워집니다.

〈자료1〉 국가별 국민총생산(GDP, 단위: USD1,000,000, 출처: IMF)

	1990	2000	2009	2015
미국	5,979,575 (1)	10,284,750 (1)	14,418,725 (1)	17,947,000 (1)
중국	392,505 (11)	1,205,263 (6)	5,059,716 (2)	10,982,829 (2)
일본	3,103,699 (2)	4,730,987 (2)	5,035,141 (3)	4,123,258 (3)
한국	279,215 (16)	561,595 (12)	901,935 (14)	1,376,86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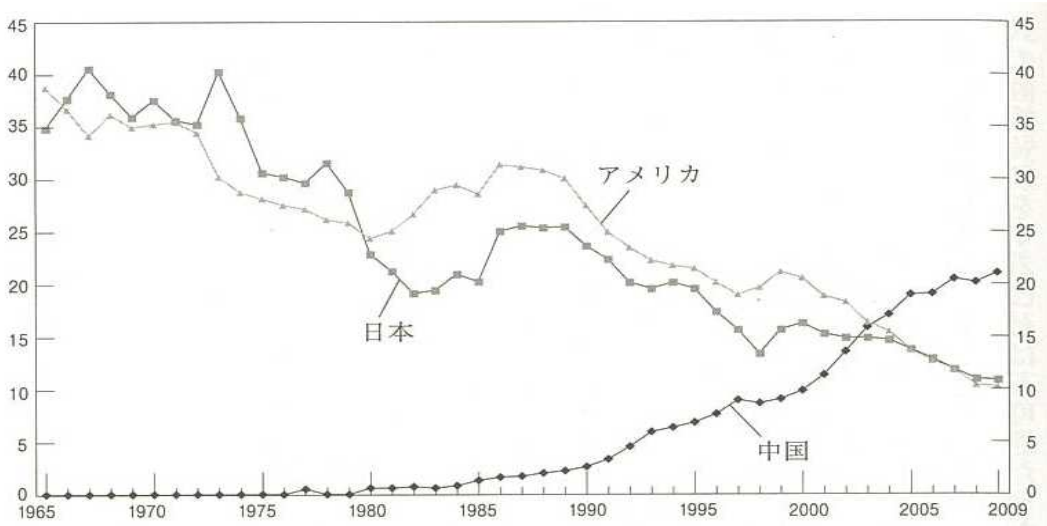
출처 : GLOBAL NOTE(<http://www.globalnote.jp/>)

〈자료2〉 한국의 국가별 수출/수입(2015년, 단위: USD1,000,000)

국가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수지
중국	(1위) 137,123.9 (26.0%)	(1위) 90,250.2 (20.6%)	46,873.6
미국	(2위) 69,832.1 (13.2%)	(3위) 44,024.4 (10.0%)	25,001.6
일본	(5위) 25,576.5 (4.8%)	(2위) 45,853.8 (10.5%)	-20,277.3
총액	526,756.5 (100%)	436,498.9 (100%)	90,257.5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자료3〉 한국 무역에서 주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수출입 합계)



※ 출처 : 木村幹 『日韓歴史認識問題とは何か』 ミネルヴァ書房, 2014년, 59쪽

〈자료4〉 국내 입국자 수 변화(단위:명)

국가	1966년	1993년	2014년
중국	2,110 (2.4%)	27,784 (4.8%)	5,387,859 (42.4%)
일본	16,871 (19.5%)	1,468,181 (57.1%)	2,254,307 (17.7%)
총계	86,349 (100%)	2,568,494 (100%)	12,682,019 (100%)

※출처: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2. 역사문제의 역사적 경위

한일 간 역사문제는 기본적으로는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한국 강점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보상했는가, 한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 가장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야스쿠니신사 문제,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 역시 일본의 한반도 침탈에서 비롯된 역사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5〉 2016년 한일 역사현안 개요

	현안	쟁점	2016년 일정 및 주목할 점
1	독도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2월)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2.22) 4월) 외교청서 발표 7월) 방위백서 발표
2	일본군'위안부'	한일 합의 내용 이행 여부	한일정부) 재단 설립과 사업 추진
		강제연행 · 성노예 부정	일본정부) 국회, UN 산하기구 등 발언 일본민간) 국제사회 상대 홍보
3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한일관계사 왜곡 기술	4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 독도, 식민지/침략전쟁 관련 기술
4	야스쿠니신사	총리 및 각료 참배	4월) 야스쿠니 춘계예대제(4.21~23) 8월) '종전기념일'(8.15) 10월) 야스쿠니 추계예대제(10.17~20)
		한국인 합사철폐 소송(1건), 총리참배 위헌 소송(2건)	소송 판결 여부
5	강제동원 (전후보상)	한국인 피해자 파기 환송심(2012.5.24) 대법원 판결 - 2013.7.10 서울 고등법원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 4명 1억 원씩 지급 판결 - 2013.7.30 부산 고등법원 미쓰비시에게 피해자 5명 8천만 원씩 지급 판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판결 여부
6	역사수정주의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	논의 및 발표 내용
		정치가 역사수정주의 발언	발언 내용
		우익 동향	발언 및 출판물 내용
		유네스코유산 강제동원 사실 기재 여부	약속 이행 여부

1945년 8월 한국이 일본의 강점에서 해방되고 나서 6년이 지난 1951년 10월 20일 한일 간에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일제 35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은 근본적으로 달랐고, 이로 인해 한일회담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일본은 식민지배가 병합조약에 의한 합법 통치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일본의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53년 10월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발언입니다. 구보타는 법률적 청구권을 주장하는 흥진기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본이 36년간 별거숭이산을 푸르게 바꾸고 철도를 건설하고 논을 늘리는 등 많은 이익을 주었으므로 일본 측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한일회담은 4년 반 동안 중단됩니다. 13년 8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한일협정이 체결되지만, 양국 간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병합 조약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지금은 무효이나 당시에는 유효하고 합법적'이었다고 해석합니다.

1982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정부에 의해 일본의 '침략'이 '진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문제가 다시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등장합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1982년 8월 26일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을 깊이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표명하고,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는 이웃 나라들을 배려하겠다는 '근린제국조항'을 만드는 것에 의해 일단락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독립기념관을 건설합니다.

1980년대 들어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였습니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 신사가 침략전쟁의 주모자로 처벌받은 A급 전범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A급 전범은 1978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고, 이 사실이 1979년 4월 19일 여론에 공개되었습니다. A급 전범들의 합사 뒤에도 20회에 걸친 총리의 참배가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된 것은 1985년 8월 15일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참배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카소네 총리가 ‘공식참배’임을 내세웠다는 점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 등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발하자 나카소네 총리는 1986년부터는 “A급 전범 합사는 침략당한 상대방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참배를 중지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 소지는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지만,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과거사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됩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급증하는데,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였습니다. 일본정부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 및 ‘위안소’ 운영에 정부와 군이 개입했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목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와 관련 단체는 이 기금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일본정부의 법적 보상과 공식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정부도 이 기금에 의한 ‘보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일 및 한중 외교에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1994년 6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사회당 내각이 발족한 것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총리담화를 추진합니다. 1995년 6월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을 표명한 ‘역사를 교훈삼아 평화 결의(決意)를 새로이 하는 결의(決議)’가 채택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총리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총리 담화는 포괄적인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배상,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모두 해결되었고 정부가 개인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총리들은 무라야마 담화를 원용하거나 계승한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인식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와는 상충되는 행동과 발언을 하면서도 무라야마 담화를 기계적으로 인용한 결과, 일본정부의 반성과 사죄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끝나게 됩니다.

〈자료6〉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변화

연월일	주체	형식·사안·주요내용
1965.2.20	일본정부/ 한국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 양국 외교부장관 공동성명 양국 간의 긴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깊이 반성
1972.9.29	일본정부/ 중국정부	공동성명 〈침략전쟁〉 일본국이 전쟁으로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
1982.8.26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교과서 왜곡〉 한국·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을 깊이 자각
1985.8.14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과거사 전반〉 ※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8.15)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자각하고 깊이 반성
1992.7.6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일본군‘위안부’〉 위안소 설치, 운영, 위안부 모집, 업자 감독에 정부가 관여한 사실 인정

1993.8.4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일본군'위안부'> 위안소 설치·운영, 위안부 모집이 정부와 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및 모집에 관헌이 직접 가담한 사실 인정
1995.8.15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침략전쟁> ※ 종전 50주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1998.10.8	일본정부/ 한국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2001.8.13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8.14)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특히 아시아 근린제국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慘害와 고통을 강요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
2002.9.17	일본정부/ 북한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2005.8.13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침략전쟁> ※ 종전 60주년 한국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 무라야마 담화의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삭제
2010.8.10	일본정부 총리	담화 <강제병합·식민지 지배> ※ 한국 강제병합 100년 식민지 지배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나아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의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을 명기
2015.8.15	일본정부 총리	담화<침략전쟁> ※ 종전 70주년 1931년 이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2001년 4월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가 검정을 통과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2001년 취임 이후 2006년 퇴임 때까지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함에 따라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발언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4월 검정을 통

과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중학교 공민교과서에는 ‘竹島는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되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도발로 의해 한일관계는 파행을 겪게 됩니다.

2006년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파행된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2007년 3월 아베 총리는 일본 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EU, 대만, 한국 의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를 하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둘러싼 과거사 청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아직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2008년 7월 14일 독도를 일본영토로 교육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기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고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2010년 이후 검정을 통과한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지리, 공민)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기술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1월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010년 6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총리가 된 간 나오토(菅直人)는 8월 10일 총리담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정치 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기하고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간 총리담화는 한국 병합은 부당하나 합법이라는 일본정부의 기존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이를 위한 자료공개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방안의 모델로는 전시 중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수용 문제를 사죄하고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규정한 법률(1988)’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목적에서 ‘(강제수용의) 부정을 인식하고, 합

중국 국민을 대신해 사죄하고, 그것을 공중(公衆)에게 알리고, 똑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 2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 자민당총재가 총리가 되면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아베는 2012년 9월 15일 자민당 총재선거 토론회에서 '고노 담화로 인해 일본군이 마치 여성들을 유괴해 강제로 위안부로 삼았다는 불명예를 일본이 짊어지었는바, (아베 1차 내각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한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총리에 취임한 아베는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2013년 12월 26일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합니다. 또한 아베내각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발언을 되풀이하면서도, 2014년 6월 20일 고노담화의 작성경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고노담화에 손상을 가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5일 아사히신문이 제주도에서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증언에 근거하여 작성한 기사들을 취소한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보수 정치가와 언론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2015년 8월 발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담화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친 시기는 서방 국가에 의한 제국주의 질서였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의 한국과 타이완 침략과 강점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부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 타협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군

의 관여 하에 많은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피해자 치유 및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재단 설립 기금으로 10억 엔을 거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단체들은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일본의 전후처리와 역사인식 문제로 충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과 교류를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원조·수직 분업에서 경합을 넘어 상호 협력·수평 분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한일 간 역사 마찰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회피, 완화시키면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매우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 존중이라는 기본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평화와 역사문제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동북아평화와 역사문제

이헌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1. 역사와 정치 : 왜 역사가 문제인가?

냉전기의 집단적 이념대립이 끝나고 국가 간의 개별적인 경쟁과 각축이 일반화됨에 따라, 각 국가, 민족의 전통문화와 역사관도 다기(다양)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가 간 힘의 균형도 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동아시아에는 역사 갈등이 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히 한중, 한일, 중일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두드러진다. 이들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고 문화적, 인적 교류도 긴밀하지만 오히려 역사문화 갈등이 치열하여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용어까지 나타났다.

정보전달이 말이 달리는 속도에 의존하고 기록과 기억의 수요자가 소수의 통치계급에 국한되던 전통왕조시대에는 역사는 통치를 위한 교훈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보가 빛의 속도로 대중에게 전파되는 현대사회, 특히 정보가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대중의 집단적 의사표시에 반영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치에 투영된다. 한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경제가 발전될수록,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서의 역사는 현재의 정치현상에 더 강렬하게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적 관심이 다양화될수록 역사에 대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식인들은 더

넓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의 사실을 발굴하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논쟁의 재료를 생산한다. 일반 사람들은 향상된 권리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원(grievances)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국가나 사회별로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반응 행태를 보이게 하고 이는 다시 서로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그리고 국민들간에 더 강한 집단적 동류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을 즐기게 된다. 또한 그 사회가 가까운 과거에 식민지배나 외부의 침략 같은 고난을 당했다면 그러한 경향은 더 강해진다. 특히 그것이 이웃국가와의 문제라거나, 영토문제와 결부될수록 대외적으로 그만큼 더 강한 배타적 nationalism으로 표출된다.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외교관, 군인들의 일거리가 생겨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즉 역사인식문제가 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2. 동북아정세와 역사문제 : “Asian Paradox”의 실체

아시안 패러독스(Asian Paradox)는 원래는 흡연률이 미국보다 높은 아시아인들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과 폐암 발생률이 낮다는 의학적인 역설이었다. 2006년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팀이 녹차의 효능을 분석하면서 쓴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인 2012년 10월 또 다른 의미의 '아시안 패러독스'를 최초로 논했다.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의 수준에 비해 정치와 안보 차원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었다. 물론 정치나 안보분야보다는 경제적 상호의존이나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상례이다. 그 자체가 역설

은 아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는 역사문제가 갈등의 요인으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파라독스를 언급한 것이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한, 중, 일 삼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 및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제국주의일본이 19세기말 이래 한국, 중국, 아시아에서 저지른 제국주의적 침략역사와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에 관해 과거 일본정부가 인정한 기존입장을 번복하거나 그 범죄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1980년대부터 전개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한, 일간의 갈등은 다음 세대에 대한 역사교육 문제에 관한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도 주변국의 국민적 정체성과 역사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역사 갈등을 심화시켰다.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역사논쟁은 동아시아 각국의 상이한 역사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아시아 정치관계에 투영되는 역사와 관련된 갈등 문제는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네 가지 분야의 갈등으로 관찰된다. 즉, 역사인식과 관련된 근세이후의 오래된 스트레스로서 일본에 의해 변형되어 도입된 근대유럽역사학의 프레임, 예를 들면 일본우월적인 동양사 개념이나 소위 식민지사관이 남겨놓은 국내 및 각국 간의 역사 갈등이 있다. 이는 주로 역사학계간의 논쟁, 또는 역사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마찰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1945년 이후 냉전의 대립전선 속에서 배양되어온 현대사에 얽힌 갈등이 있다. 여기에는 역사반성 문제나 한·일 국교정상화협정과 같은 전후처리 또는 식민지청산과 관련된 상이한 인식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지속적인 갈등과 마찰이 있다. 개별적 이슈로는 역사교과서 문제, 군대위안부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식민지시기 전시강제동원 보상 문제 등이 있다. 남경학살에 대한 일본정치인들의 학살숫자 줄이기나 냉소적인 부인은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동경전범재판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체제를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세 번째는 이웃국가간의 수백 년 이상 된 오래된 교류와 갈등의 역사 그 자체가 국민들의 감정 속에 녹아있고, 그것이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첨예화하는 역할을 한다. 임진왜란이 한국민의 집단적 기억 속에 일본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거나, 19세기에 인위적으로 조장된 일본인의 한국인 폄하 경향이 그런 예이다.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지위 회복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초래되는 정치적 갈등이다. 중국은 과거 중국 중심 천하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고, 일본이나 미국은 이를 견제하는 데 따른 정치적 대립의 양상이 그것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회기정책과 미.일동맹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적인 안보 갈등 요인이다.

동아시아,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지역에서는 냉전체제 해체 이후 이러한 다층적으로 얽혀있는 역사인식 문제 외에도, 다양한 대립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남북 분단으로 냉전적 대립전선이 계속된다. 주변 강대국들도 유사시에는 냉전시기의 프레임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냉전 소멸이후 동맹의 대립전선도 재조정되고 있다. 미일동맹은 원래 소련을 주적으로 결성되었으나 이제는 중국이 주 대상이 되고 있고, 미국은 한미동맹도 미일동맹의 프레임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비핵화/비확산 대립전선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5개국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영토문제와 관련된 중.일, 러.일, 중국과 동남아국가 및 미일 간의 대립전선도 있다. 지역 헤게모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간의 대립전선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에 도전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은 과거의 지역 패권 회복을 위해서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미국을 거드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19세기적인 세력균형론이 다시 화두로 등장한다. 이러한 복잡한 대립구도가 얽혀 있는 환경에서 사랑의 3각관계와 같은 3국간 이해관계도 작용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체제에서 어떤 경우에는 삼국의 협력보다 누가 누구의 편인가 하는 점이 부각된다. 한.미.중관계나, 한.미.일관계프레임도 그렇다.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전후하여 대두하는 새로운 안보위기에 관한 많은 우려와 논의가 소개되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빈번하게 환기되었다. 동북아지역에 관해서도 19세기말, 20세기 초의 정세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 갈등이 당장의 안보문제는 아니겠지만, 정세가 급변하고 이웃국가관계나 동맹관계에서 결정의 순간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는 그대로 되풀이 될 것인가?

3.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tracing back roots of intractability of the historical disputes and conflicts

동아시아의 역사문제가 논쟁을 넘어 풀기 어려운 갈등(intractible conflict)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유럽과는 전혀 다른 다음의 세 요인에 기인한다.

1) 왜곡되어 도입된 근대유럽역사학의 영향

(1) 유럽의 근대역사학의 전파; 제국주의적 역사학

유럽의 역사학은 그리스로마시대의 서사적 역사기술과 중세의 신의 섭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을 거쳐 19세기에 들어와 비로소 기록보관소에 보존되어있는 문서(1차 사료)의 연구 분석을 중시하는 과학적 근대역사학으로 발전하였다. 근대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랑케의 역사방법론은 객관적 사료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wie es eigentlich gewesen"/as it actually happened) 기술하는 것을 그 본령으로 삼았다. 그러나 유럽의 역사학은 유럽우월적인 제국주의적 식민지 침략을 역사의 흐름으로 합리화 하였다. 특히 독일의 역사학은 독일통일을 전후하여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발전은 신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독일우월적 배타적 역사관으로 변질되었다.

(2) 일본중심의 우월적 역사관

한, 중, 일 삼국간의 역사 갈등은 일본의 근대역사학이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화에 성공한 일본에서는 시라토리에 의해 이러한 독일중심적 역사학이 도입되어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여타 민족을 타자화하여 열등화하는 “동양사” 프레임을 완성하였다. 일본중심사관에서 신의 섭리는 천황의 신성과 신도로 구현되었다. 시라토리의 “동양사”관은 일본의 한국식민지화와 만주침략을 역사적으로 합리화하는, 영토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는데 활용되었다.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의 팽창을 합리화하고 부추기는 다양한 조류의 동아시아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후 그러한 경향의 연구는 대체로 ‘동양사’ 연구라는 범주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시아주의’와 ‘동양평화’라는 명분 속에서 일본 역사학계는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지역으로 식민지와 세력권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 왜곡 기술되고 전파됨에 따라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적 역사기술 전통이 출현하게 되었다.

(3) 중국의 중화민족 역사관

중국의 근대역사학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의 제국주의침략적 역사관에 대한 저항과 모방이라는 모순적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근대사학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량치차오는 일본식 동양사와 일본사의 기술방식을 모방하여 중국사를 기술하였으며, 구지에강(顧頡剛), 푸쓰니엔(傅斯年)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일본의 만한분리사관, 만몽사관에 저항하여, 중국 주변의 이민족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을 제시했다. 중국사는 한족이 주변민족들을 동화하여 중화민족으로 확대한다는 제국주의적 역사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대 이래 한반도가 자국의 판도였으며, 韓種을 중화민족의 일원이라고 강변하는 등, 일본이 왜곡한 한국사 인식을 중국식으로 전유하였다. 서구근대사학 이름으로 침략 사관을 창출하였던 일제의 역사 인식 체계를 그대로 중국의 역사관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애국주의적 역사서술의 중점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이다. 이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문화를 매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1954년 헌법에 규정된 이래 1988년 페이샤오통(費孝通)의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으로 정교화되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이미 중국의 근대 역사학의 형성 과정에 내포되어 왔던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을 설립하고, 변경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역사공정을 추진하여왔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 동북공정은 한국인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 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고대부터 중국인들이 외국으로 인식하였던 동북지역의 역사를 현재의 영토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자국사로 편입하는 정치적 역사인식은 큰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4) 한국역사의 시련

한국은 19세기 이후 거의 100년간 근대사학의 방법론으로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기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한국의 역사는 일본의 한국침략과 식민지병합 과정에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된 역사 기술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는 상고사와 고대사부터 축소 왜곡되고 한국민족의 자립적 발전론이 부정되고 타율성이 강조되었다. 중국의 동북공정마저 감안한다면, 결국 한국의 역사 기술 권리는 일본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의 역사문제는 이웃국가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문제, 식민지시기 군대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주로 20세기의 역사문제에 관한 인식의 갈등으로 현재화되는 정치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반면, 고대사영역의 역사문제는 학계의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반면 중국의 동북공정류의 한국사 왜곡은 아직까지는 양국관계 정치문제화는 되지 않고, 잠재적인 마찰 요인으로 남아있다. 한편, 한국의 초기사학자들은 일본의 2세대 역사학자들에 의해 교육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한국사학계에서는 식민지사관 논쟁이 진행 중이다.

2) 고대 사료에서 중국의 압도적, 독점적 지위

동아시아 3국 관계에 관한 역사연구는 사기, 삼국지위지동이전, 후한서 같은 중국의 사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왕조를 위해 기록된 중국 중심의 사료나 중국인의 관점에서 이민족에 관하여 언급된 기록들의 사실성이나 객관성에 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유럽에서는 로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로마의 유산은 공유할 수 있지만 아시아에서 중국 역사의 유산은 중국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오히려 nationalism으로 무장한 중국의 역사관은 주변국의 역사적 아이덴티티와 충돌하고 있다.

3) 중국어 : 문자와 언어학적 특성 문제

표의문자인 한자는 긴 시간 속에서 그 형태는 물론 발음도 변해왔다. 대략 2000년 전의 한나라 시대의 발음을 유추한 상고음이나 1000년 전 당송시대의 발음으로서 현재 광둥어로 남아있는 중고음, 그리고 만주족이나 몽고족의 발음(일명 胡語)의 영향으로 변질된 현재의 보통화 발음을 철저히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외국이나 이민족에 대해 기록된 중국의 사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는 오늘날의 한자 발음과는 전혀 다른 발음으로 읽혔을 것이다. 외국의 지명이나 민족명, 인물의 이름 들은 모두 발음을 표시하는 가차의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므로 그 당대의 발음을 유추해야 보다 사실에 가까운 역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돌궐은 오늘날의 토이기인가?, 동호, 숙신, 말갈, 여진, 거란 등 민족은 서로 어디가 다르고 같은가? 오늘날 캐나다(加拿大)는 왜 “자나다”로 읽는가? 만약 다른 기록이 안 남는다면 지우진산(舊金山)이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중국어 명칭(수십년 전에는 桑港 이었다)이라는 것을 수백 년 뒤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지우진산(舊金山)과 상강(桑港)이 같은 도시이고, 뉴유에시바오(纽约时报)가 뉴욕타임즈이고, 시라리(希拉里)와 터랑푸(特朗普)가 2016년 미국 대선의 대통령후보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4) 한, 중, 일 3국의 근대 서구화 과정의 역사 complex

개인의 콤플렉스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민족이 집단적으로 공통의 피해의식에 관한 기억이 남아있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정책 차원의 콤플렉스로 반영되고 타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타협이 어려워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그러한 집단적 콤플렉스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 갈등 문제가 더욱 꼬이는 이유이다. 중국은 근대 19세기 아편전쟁 이래 외세의 침략, 특히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데 대한 수치심이 남아있다. 그들 스스로 150년 간의 치욕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민족의 기원에 관한 스스로의 콤플렉스와, 근대화 과정에서 고대사를 왜곡했다는 비판, 그리고 패전국이자 전쟁범죄국이라는 콤플렉스를 안고 있다. 한국은 20세기 초에 오랜 이웃국가이자 문화적으로 뿔뿔이 떨어진 나라로 여기던 일본에 의해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한국민족의 아이덴티티인 고대 역사가 왜곡, 부정된 데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삼국 공통의 콤플렉스가 유럽의 사례와 같은 개방적 역사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5) 역사인식에 대한 냉전구조의 영향

이러한 역사왜곡문제는 냉전 대립이 없었다면 아시아에서 2차 대전이 종료되는 기회에 정부와 학계간에 발전적인 대화가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련,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산진영과, 미국, 일본, 한국의 민주주의 진영으로 대립되는 냉전의 전선이 형성되면서 역사문제보다는 이데올로기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관련국가간 역사문제에 관한 원망(grievance)보다는 이데올로기 가치 면에서 같은 편으로서의 인식이 우선하는 시대가 70년 이상 지속되었다. 냉전 소멸 후 포스트 냉전시대에 와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89)”이라는 타이틀과는 정반대로 억제되어 왔던 역사 갈등이 표면에 분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대의 당연한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대립전선에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93)” 적인 문명대립 전선이 추가되었다.

6) 한, 중, 일의 민주주의 수준과 성격

EU 국가들이 중심이 된 유럽의 역사 화해는 이들 국가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데 힘입은 바가 클 것이다. 보편화되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국가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평화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은 제한적으로나마 역사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한, 중, 일 삼국은 각기 다른 수준, 다른 형태, 다른 내용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일본은 입헌군주제하의 내각책임제 형태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 체제이나 삼국중 가장 “시끄럽고” 다이내믹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도 각기 그 범위와 사회적인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도 역사 갈등을 조장하거나, 역사 갈등 해소 노력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7)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통인식 부재

유럽의 보편적인 사상은 공통의 종교인 기독교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도주의나 박애주의, 자유와 평등주의가 공통의 정치적 명분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삼국은 그러한 공통적 사상이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중국은 종교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일본은 신도가 종교를 대신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가 거의 양분하고 있으며, 삼국중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가 널리 퍼져 있다. 보편적 가치를 공감하지 못할 때 역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8) 주변국의 감시기능 부재 :모두가 당사자

수십개의 나라와 민족이 공존해 온 유럽에서는 약국간의 역사 갈등을 지켜보는 많은 제 삼자가 있어 갈등의 객관적 타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쟁, 홀로코스트, 민족의 이동 등 극단의 재앙을 경험한 교훈을 바탕으로 역사를 반성하고 갈등을 봉합하여 미래 평화지향적 해결을 하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삼국은 서로가 당사자이면서 양자관계가 얽혀 있어 이러한 건설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9) 지역통합 부재

아시아에서는 동남아 10개국 이 ASEAN을 결성하여 모범적으로 정치경제적, 문화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은 아직 그러한 공동체는 물론 공동의 안보 인식도 공유하기 어려운 정세에 있다. 한, 중, 일 삼국 간의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해서 EU의 사례와 같은 공동의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10) 자국 역사기술 중심 교육

한, 중, 일 삼국은 아직도 자국 중심의 국사를 역사교육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은 개별국가사 보다는 지역사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애국이 강조되고 그러한 애국적 내셔널리즘이 국사에 반영될수록 역사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한국은 매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지적하고, 한국의 시각을 감안하여 수정하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 역사교과서 관련 마찰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11)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G2 강대국으로의 도약은 중국의 애국적 역사 기술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엔 중국이 일본 흉내 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기도 한다. 중국의 역사문제는 앞에서 이미 상술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따른 지역질서의 변동과 맞물려 있어서,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 내의 역사 갈등은 향후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12) 한반도 분단 상태의 지속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는 한 주변국들 간의 역사인식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역사문제는 아주 쉽게 정치적 이해관계나 갈등으로 반전될 수 있다. 동북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은 한반도가 약화되었을 때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과 같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관점에서는 분단된 한반도가,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세력의 접근에 대한 유용한 방파제이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을 때 정치적 대립 전선은 더욱 첨예화된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동아시아지역을 긴장과 대립구도로 만들고 있다. 그게 북한에게는 유리한 구도이기 때문이다. 북한 이외에도 누군가 긴장과 대립 구도를 원하지 않을까?

4. 왜 역사에 대한 반성과 기억이 필요한가?

헤로도투스는 『역사』 첫머리에 “일어났던 일들이 시간에 의해 지워지지 않고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다”고 했다. 그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왜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 대체로 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왕이나 정치가들은 중국의 고대 이래의 역사를 통치의 교훈으로서 연구하고 기억하였다. 잘못된 역사적 사례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좋은 사례는 적극 권장하였다. 이에 역행하는 자는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상식이다.

나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 상식의 핵심이다. 국가나 사회는 그 일을 기억하는 행사를 하고, 그 일에 책임도 없는 후대의 국가지도자가 사죄를 함으로

써, 국민이나 이웃 국가들에게 나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피해자는 그러한 행위를 보상으로 인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평화가 되고 신뢰가 된다. 그러나 그 나쁜 일의 행위자나 후손이 그러한 보상행위를 회피하거나 부정한다면, 이미 표출된 역사 반성의 정책과 정신을 다음 정부가 훼손하거나 부정한다면,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평화의 기초는 손상된다.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심리적 불신이 상존하게 된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새가 버틸 수 있는 무게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너무 무거워지고 있다.

역사는 기억과 기록으로 만들어진다. 아시아 각국들은 근세 이래 각자의 고난의 기억을 안고 있다. 특히 수천 년 동안 이웃으로 살아온 한국, 중국, 일본 간에는 아직도 정산하기 어려운 역사의 상처들이 남아있다. 역사를 자신의 직접적인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살아 있다. 아마도 근대 역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러한 양태가 다시 되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일 것이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본적인 안보구도는 100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 1965년 한·일 국교 수립시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격차는 약 30:1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3.5:1 정도로 좁혀졌다. 현재 한·일간의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된 대립의 근저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작용한다. 그러나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는 마치 중국이 과거의 소련을 대체하는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일본은 미·중 대립구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 한다. 과거 영·일동맹을 연상시킨다.

한국은 19세기 말 이래 국가주권의 침탈, 1950년의 내전, 절대빈곤과 민주주의 혁명을 모두 경험하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하였다. 한국인이 침략을 위한 역사기술을 한 적이 없다. 정치공학적 역사왜곡을 한 적도 없다.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국주의적 침략과 배신의 최대 희생자였던 한국인들은 강대국 간의 각축 속에서 과거 역사의 교훈이 간과되지 않기를 여전히 바란다. 한국이 지역사 개념의 동아시아사 교육을 선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 역사 갈등 치유 노력과 그 한계

1) 각국 정부의 노력

각국 정부 차원의 노력은 주로 특정 역사적 사안에 관한 일부 정치인의 자극적 발언으로 국민 간 갈등이 악화될 때마다 정부가 이를 봉합하는 형태로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체로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 행위에 대해 사죄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나 천황의 사죄 발언을 부인하거나 훼손하는 발언으로 야기되고, 이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이 반발하는 형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 역사문제가 외교적 마찰로 발전하고, 정상회담 등 외교교섭을 통해서 적절한 선에서 봉합하곤 했다.

예를 들면 2001년 일본의 우익단체가 제작한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국정부의 항의에 이은 양국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일간에는 2002년에서 200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역사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위원회는 2010년 2월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양국 역사학자가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기구를 통해 공동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 일본이 왜곡 기술한 한일고대관계사 인식을 바로 잡았다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중·일 간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역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었다. 중·일역사공동위원회는 2006년 8월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중일 양국의 외교적 대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2006년에 조직되었다.

한·중간에는 최근에 와서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차관급 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2) 한·중·일 NGO 등 시민사회의 노력

2001년 일본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노골적으로 정당화한 『새로운 역사교과서』(후소야 판)가 동아시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한·중·일 시민단체들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직하였다. 일본에서는 역사·평화·인권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2001년 이후 점차 중국에서도 민간단체들이 생겨났고, 개별 연구자, 교사들이 지속적인 교류 활동이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시민단체는 아직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서 정부의 방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90여개의 역사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를 설립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 공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다이나믹한 민주주의 환경 속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공세적이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시민단체들은 3국 공동의, 또는 한·일 양국 공동의 역사 부교재를 출간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간의 양자간 공동 노력도 긴밀히 추진되어 여러 공동 역사교재들이 발간되었다.

(1) 동아시아사 기술

한편, 2009년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사 공동 서술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7년 동아시아사를 정식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동아시아사』 교과서 발행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3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동아시아사를 정규 교과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사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상황의 변화, 새로운 인식론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한·중·일 3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많다. 민간차원에서는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교육연대나 한일 역사교사 교류회 등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사”, 한일 공동 부교재 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들은 3국의 역사를 일정 비율로 합쳐놓은 삼국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2) 역사학계간 교류

오늘날 학자들간의 자유로운 교류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중·일 간 역사분야의 학술교류는 정치적, 사회적 제약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역사학계는 자신의 오랜 역사가 지난 100년간의 정치적 환난의 과정에서 심하게 왜곡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 중국 학계와의 역사연구 교류에 적극적이지만, 중국학계는 아직도 공산당과 정부의 엄격한 통제아래 있어 외국과의 교류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고대사 관련 학술교류는 피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학계는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리버럴한 역사인식하의 대외교류가 심리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다.

6.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1) 개방된 역사인식

유럽의 사례, 유네스코 등의 노력을 교훈으로 각국의 정부나 정치권, 학계의 지도계층이 인근국과의 역사문제에 보다 계몽되고 개방적일 수 있다면 지역정치에서의 역사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인들의 말처럼 더 큰 재앙을 겪어야 가능할까?

(2) 역사 서술 상의 신뢰 구축 조치(CBM principle in historiography)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는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역사현안이 상호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역사 서술 상의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문화나 역사 등 학술분야에서는 합의된 룰이나 원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인문학적 양심에 의존할 뿐이다. 따라서 안보상의 신뢰구축조치와 같은 룰을 만들기도 어렵고 지켜진다는 보장도 어려울 것이다. 상호간의 신뢰를 보장하는 상호주의나 타협도 낮은 분야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안보상의 신뢰구축 초기 조치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검정 등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일정한 시간 전에 관련국에 통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접수하고 회답하는 선의의 원칙(comity)을 정부 상호간에 확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관련 정부는 민간학계간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적극 권장 지원할 수도 있다. 정부나 정치권, 학계의 지도계층이 역사인식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계몽되고 개방되어 있다면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3)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역할

관련국 정부 간 및 민간학계의 협력은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프랑스 공동 교과서의 제작의 예에서 보듯이, 다양한 차원의 역사 대화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당국의 정치적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사를 일국적인 차원이 아닌 미래적, 지역 협력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제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일국사적인 틀에서 인식하고 기술하는 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대화는 오히려 서로가 공감하는 지역사, 세계사 등 다양한 접점이 가능하며, 바람직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공동의 연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유럽의 지역사 기술이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과서 제작은 추진할 가치가 있다.

둘째는 역사학과 함께 역사 교육적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사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권, 자유, 민주, 평화, 번영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

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그런 가치를 미래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작업이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폴란드의 역사 대화가 좋은 모델이다.

(4) 학술분야의 자율성 확대 democratization and liberalization in academic area

자유로운 학문적 토론이 어렵다면 이제까지 언급해온 모든 노력이 쓸모없게 된다. 학문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사회적인 압박이 심한 정치사회적 조건 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결국 아시아에서의 역사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선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교류 분야에서 정치권력의 규제나 개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이러한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양자간, 삼국간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합의되어 그 추진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치권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언론도 국제적인 갈등을 조장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역사 대화와 학술교류를 장려해 주어야 한다.

(5) 각 분야 교류의 확대를 통한 국민간의 이해 증진

정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그 동안의 경쟁구도의 역사논쟁과 문화인식 상의 인식과 실천을 교류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한중 정부간 진행되는 한중인문교류는 이러한 사업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통신사와 연행사 기록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동안 '조선통신사', '연행사' 등 국제교류 관련 대표적인 유산이 주로 환기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공동문헌에 대한 공동 연구와 공유사업을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공통된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보인다.

역사유적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거나, 한중일의 각 각 대표적인 역사문화 유물을 구미에 공동 전시 하거나, 구미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와 같은 문헌공유 체계를 통한 인문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정부는 민간차원의 역사대화

유럽의 성과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문화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세대의 교류, 문화교류의 확대는 상호간 역사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EU, UNESCO 등 Outsider의 모델 활용

유럽에서도 역사교과서 문제는 국가간 교섭 대상이 되어 왔다. 일국의 역사 인식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간 국민간 상호 인식과 미래전략을 반영하고, 따라서 향후 국제 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동유럽의 민족 전쟁의 한 원인이 역사 기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역사학은 핵물리학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탄식한 바 있다. 유럽 각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멸적인 전쟁을 겪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초국가적 합의를 이루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역사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유럽의 성과는 동아시아의 역사문제의 해소에도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대화를 통해 공동의 역사인식에 도달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안정된 국제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경험은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교과서대화에서 볼 수 있다. 유럽의 역사교과서 대화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민족간 평화를 지향하였다. 이는 또한 유럽적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고 유럽공동체의 등장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E. H Carr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의 서두에 역사 기술의 객관성에 관한 Acton 경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Acton은 케임브리지 근대사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집필을 맡은 역사가들에게 “우리의 위털루(에 관한 역사)는 프랑스와 영국, 독일과 네덜란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사교과서의 저자인 이삭(J. Isaac)은 프랑스 역사교과서에 대한 독일인의 비판을, 타자의 관

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이 편찬한 교과서에 독일인의 입장을 병기했다. 숙적인 독일의 관점도 고려한 “두 가지 시각(deux points de vue)” 이론은 다자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방법론이다.

독일에서는 에케르트(G. Eckert)가 중심이 되어 이삭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 제2차 대전 후 설립된 게오르크-에케르트 국제역사교과서연구소는 유럽의 교과서협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공통된 역사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연속적·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1935년 시작하여 70년 이상 공동역사교과서를 간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역사교과서협력과 그 성과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의 학생들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럽이라는 공동의 터전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법, 즉 역사인식의 ‘국경을 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도 1972년 시작하여 2011년까지 30년 이상 공동역사교과서를 간행하였다. EU는 회원국 역사교사들의 협력단체인 ERO-CLIO의 역사교육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네스코 역시 인접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대해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서술은 상호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독일·프랑스 등 전쟁당사국간의 역사대화를 주도하여 유럽지역의 역사화해에 기여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동아시아지역의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1997년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고, 2007-2010년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7) 동아시아사 기술 개념 전파

19세기 말부터 일본은 일본중심의 독자적인 ‘동양사’ 개념을 제시했으나, 현재는 ‘동아시아’가 일반적 지역사 명칭 개념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세계에서 자국중심주의의 뿌리는 자못 깊다.

자국 중심의 역사 기술을 지양하고 “타자”의 시각을 수용하는 개방된 역사인식은 동일한 삶의 공간인 지역을 아우르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동아시아사’ 기술은 실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논의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페르낭 브로델의 지중해사와 같은 지역사가 가능할 것인가?

한국의 중등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동아시아사’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서 사유함으로써 국가 중심의 편협한 역사 인식을 넘어서서, 지역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려는 교육적 배려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출간된 『처음 읽는 동아시아사 1』은 몽골 인도네시아 등 17개국을 포함하는 확대된 동아시아 지역사를 다룬다. 한국에서 동아시아사가 강조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학계가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사 연구 및 서술은 역사갈등 문제의 체계적 연구, 해소 방안 마련과 동아시아 평화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역사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한국 학계의 시도는 이미 중국과 일본의 일부 진취적인 연구자 및 교사, 시민운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앞으로 한중일 3국 역사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세계의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의 공동연구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학계와 교사 시민단체들의 동아시아사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Tel. 02) 2012-6137 Fax. 02) 2012-6180
www.nahf.or.kr